

북한 사회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기제*

최봉대(강원대 강사, 사회학)

I. 머리말

1990년대 후반 북한 사회를 떠올린다면 많은 경우 국가 통제 경제의 마비에 가까운 상태와 극심한 식량 위기에 따른 아사자 및 국외 이탈 주민의 속출과 같은 거의 극한점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불안정한 상태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북한 상황은 서구의 한 연구자가 국내의 사회 경제적 위기의 지속적인 심화 그 자체가 한편으로 정권을 탈정당화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민 대중을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물리적 생존의 재생산에 전념하게 만들어 정치 권력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공간을

* 이 글을 작성하는 데 귀중한 조언과 제안을 해준 동료 연구자들께 감사드린다. 이들의 건설적 논평을 이 글에서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비재와 게으름에 기인한다.

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만적인’ 사회적 평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했던 1980년대 말 붕괴 직전의 루마니아 상황에 비견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현재 북한 사회의 내부 정황과 향후 발전 경로는 대단히 유동적인 것처럼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경제 개혁과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이런 외연상의 ‘비정상적인’ 정치 권력의 ‘안정적 유지’가 어떤 계기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파국으로 이어지는지를 예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유의 작업은 결코 용이하지가 않다.²⁾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이런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북한 체제가 존립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로서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하는 강력하고 억압적인 사회 통제 기제의 유지와 일종의 ‘생존 규범’으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고립 분산적인 원자화 상태 등이, 그리고 국제 정치 체제 수준에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이해 관계를 같이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억압적인 사회 통제 기

1) T. Gilberg,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Romania*(Boulder : Westview Press, 1990) 참조 이 연구자는 차우세스쿠 정권의 절대 권력의一面에서는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침식하는 혼란, 표류, 교착 상태, 공포, 탐욕, 냉소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권력 행사의 예측 불가능성은 창의적인 주도성을 감소시키고 면피주의(totyism)만 조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편으로는 심각한 정치적·경제적·도덕적·정신적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더 고립되면서도 동시에 점차로 더욱 강력해지는 리더십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Ibid.*, p. 106.

1999년 7월에 필자가 면담했던 연변 지역의 한 탈북자도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우겠는가 하는 생각에만 몰두하는 판’에 다른 어떤 생각을 할 겨를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2) 아마도 1980년대 말을 전후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 그리고 1994년의 김일성 사망 직후에 직관적인 통찰력에 힘입어 북한 사회 담론을 지배했던 ‘조기 붕괴론’의 전말을 떠올리게 되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도 하나의 공허한 시론으로 이미 그 도정이 예정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이런 극한적인 처지에 내몰린 북한이 왜 ‘조기 붕괴’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체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설적 시론 수준에서 검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하기가 쉬지 만은 않은 ‘기만적인’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는 한은 한시적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제의 작동이나 주민들의 원자화 상태에 관한 논의들이 지배 권력의 체제 유지 역량 보유 정도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할 때,³⁾ 일반 주민들이 지배 체제를 어떤 맥락에서 수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근거들만으로는 온당하게 규명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다.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 특히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을 행위 주체인 주민들에게 내재화되어 그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구속하는 집단적인 사회 심리적 힘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 3) 예컨대 사회주의 국가·당의 통치 역량의 약화 문제를 ‘조직화된 의존, 감시 역량, 상별 능력’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를 체제 해체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 장치로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글로는 김명수, “계급 및 계층 구조와 사회 불평등”, 『북한 사회의 이해』(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7) 참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원인을 유형론적으로 나누어 다원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 관해서는 D. S. Lane, *The rise and fall of state socialism*(Cambridge : Polity Press, 1996) 참조
 - 4) 이 글에서 사용하는 ‘일반 주민’의 구체적인 지칭 대상은 상당히 모호할 수밖에 없다. 원래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와 관련하여 특정 집단 성원들을 지칭하여야 하나, 피면담자인 탈북자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글에서 검토된 중언들에 비춰볼 때 탈북자들은 대체로 북한 사회의 ‘하층’ 또는 ‘중하층’에 속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주민’에 속한다고 보기 곤란한 피면담자들은 ‘엘리트’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하에서는 ‘일반 주민’을 ‘주민’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II. '사회주의적 멘탈리티'와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 문제

1. '사회주의적 멘탈리티'의 이분법적 가치 체계

이런 문제 의식을 정형화시키기 위한 예비적 작업으로 구동구 및 소련 사회의 해체와 관련하여 서구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논점을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서구 연구자들이 구소련과 동구 사회 대중의 사회적 의식이나 가치관, 또는 사회적 태도나 행위 양태 파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선 1980년대 초반 폴란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점증하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시킨 중요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전후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 과정이 배태할 수밖에 없었던 대중의 이중 의식과 이중적 행위 규범의 존재 및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대중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 지향을 규명하려는 작업들을 들 수 있다.⁵⁾ 주로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이른바 '제2사회론'으로 지칭되었던 이런 부류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체제 변동의 내생적 동인으로서 사회 내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립에 대응하는 사회적 의식과 행위의 이중 구조 사이의 간극, 긴장, 갈등 관계를 일차적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⁶⁾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의식

5) 예컨대 V.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참조.

6) 그렇지만 해당 사회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2사회'의 존재와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전망을 단선적으로 대응시키려는 발상은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를다고 봐야 한다. 예컨대 형가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제2사회론' 개념의 적실성 여부와 동구의 개별 사회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회주의 체제 변혁 과정에서 '제2사회'의 위상 및 역할 설정에 관한 상이한 평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Elemer Hankiss, *East European Alternatives*(Oxford : Clarendon Press, 1990), 제3장 참조. 또 폴란드의 예를 들

이나 내면화된 사회적 가치 체계와 실제 행위 사이의 단절적 관계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 데에서 이런 연구들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들과는 달리 탈공산화 이후 소련 및 동구 사회의 이행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혼란을 배경으로 하여 ‘제2사회론’과 기본적인 문제 의식을 부분적으로 공유하면서도 이를 확장시킨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 나오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1980년대의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들에서는 장기간의 제도화된 정치 사회화와 교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이른바 ‘사회주의형 인간’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 규범이 구소련 및 동구 사회의 자 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⁷⁾ 이런 문제 의식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체제 수준과 정권 수준 양자를 포함하여—를 억제하는 요인으로서 주민들의 고착된 사회적 의식과 행위에 대한 검토가 일정하게 유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현재 북한 사회의 변동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지는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 또는 그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비물질적 인 힘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이 연구들의 시사점을

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조화된 분리 상태가 사회 변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것에 유리한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거나, 체제에의 동조를 초래하는 ‘심리적 무기력 상태’를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E. Wnuk-lipinski, “Social Dimorphism and its Implications”, J. Koralewicz et al. eds., *Crisis and transition : Polish society in the 1980s*(New York : Berg, 1987)와 J. Koralewicz, “Changes in Polish Social Consciousness during the 1970s and 1980s : Opportunism and Identity”, *ibid.*도 참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구소련의 국외 추방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제2사회론’의 모태가 된 ‘제2경제’ 부문의 이율 배반적 효과(체제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 수행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잠재적으로 저해하는 효과 창출)를 지적하는 글로는 Y. Altman, “Second economy activities in the USSR : insights from the southern republics”, Peter M. Ward ed., *Corruption development and inequality*(London : Routledge, 1989), pp. 66~69 참조

7) 예컨대 G. Vainshtein, “Totalitarian Public Consciousness in a Post-Totalitarian Society”,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7, no. 3(1994) 참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하나는 구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는 사회적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잠재 의식까지를 고려하는 수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지배 권력(국가)은 그 자체의 독특한 가치 체계에 의거해서 수십 년 동안 대중을 지배해 왔고, 그 결과 사회주의 사회의 대중은 그런 가치 체계에 대한 자기 방어적 대응 전략으로서 이를 일정하게 변형 시켜 내재화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가치 체계는 ‘일상적 실행 속에서 반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체득된 사고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아비투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조직해 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상징적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하게 이 가치 체계는 양극화된 긍정과 부정의 대립적 요소들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내부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상호 규정적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단순명료한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하게 된다. 더욱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항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이 상징적 가치 체계는 작동 과정에서 ‘사악한 것’(‘상징적으로 오염된 권리’이나 가치)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자동 반응적으로 도출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사악한 오염된 권리’이 외부 세계에 존재한다는 인식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 세계의 지배적인 상징적 질서에 대한 의구심이나 회의가 제거되고, 지배적인 질서가 강화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⁸⁾ 이와 같은 특질을 갖고 있는, 현재적인(manifest) 사회적 의식의 수준만으로는 포

8) 이는 ‘사회적 사실’의 외재성과 행위 주체 구속력에 관한 뒤르켐의 문제 의식을 ‘상징적 오염’의 정화 의례(淨化儀禮)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합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시키고자 했던 메리 더글러스(M. Douglas), 유제분·이훈상 공역, 『순수와 위험』(서울: 현대미학사, 1997)의 소론의 의의를 재해석한 J. C. Alexander, “Analytic debates”, J. C. Alexander & Steven Seidman eds., *Culture and Society*(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19의 논지에 의거한 것이다.

팔하기 곤란하고, 사회적 잠재 의식의 수준에서 작동하면서 개인 행위자의 사고와 행위를 규정해 주는 비물질적인 관성적 힘을 ‘멘탈리티’라고 정의할 수 있다.⁹⁾

다른 하나는 구사회주의 사회의 해체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서, 잠재적인 시민 사회 형성의 기반으로 작용했던 이중적인 사회적 의식과 행위 지향의 형성은 해당 사회가 사회주의화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팽아적인 시민 사회의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 성립 이전의 사회 문화적 조직과 실천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비공식적인 재생산이 현실 사회주의가 부과하는 사회적 가치와 행위 규범의 정당성을 판별해 주는 준거들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⁰⁾ 이 논점이 시사하는 것은 특정 사회주의 사회의 성립 이전에 반사회주의적 사회 문화적 실천이나 행위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회주의 사회의 변화나 해체를 촉진할 수 있는 내생적 요인을 생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의 공식적인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이 해당 사회 체제의 궁정성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게 만들어주는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기억의 재생산—공식적인 기억에 의해 억압되는—전망은 더욱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논점을 연결시켜 보면, 반사회주의적이고 비공식적인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이 대중의 멘탈리티의 형성과 지속에 개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 통합적인 특정 멘탈리티의 안정적 재생산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9) P. Sztompka, "Cultural and Civilizational Change",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New York : Walter de Gruyter, 1995), pp. 243~245 참조. 이런 입론 위에서 Sztompka는 궁정적/부정적 가치 부여 및 평가 영역으로 양극화되는 동구식의 '사회주의적 멘탈리티'의 주요 대립적 구성 요소로는 '우리(사적 영역)/그들(공적 영역)', '과거/현재', '운명/행위', '부정적 자유/적극적 자유', '신화/현실', '서구/동구', '편의주의/진실' 등을 들고 있다.

10) Z. Rau, "Introduction", Z. Rau ed.,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Boulder : Westview Press, 1991), pp. 11~17 참조.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들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집합적 기억이나 멘탈리티 모두 사회적 행위 주체들의 물질적 실천 활동이 역사적으로 응축된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위 주체를 구속하는 멘탈리티의 경우 그것은 물적 토대의 규정력의 즉자적·기계적 반영물이 아니라, 행위 주체의 집합적 실천이 멘탈리티와 물적 토대를 매개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집합적 기억은 그런 매개물의 주요한 일 유형으로 위치지울 수 있고, 따라서 특정 사회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따라 여타 유형의 매개물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멘탈리티와 집합적 기억에 관한 논의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서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 문제를 사회적 통합 기제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시론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의 유형적 특질과 자료 활용 문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 양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질적·양적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조사 대상의 특수성에서 불가피하게 기인하는 분석 결과의 편기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렇지만 이런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생산된 이 분야의 연구들은 일정하게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분야의 연구가 좀더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의 연구들이 주로 지배 체제의 정당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주민

들의 사회적 의식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며, 1990년대의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분석을 통해 통일 이후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설정과 실행 방안 모색을 염두에 두고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이 연구들이 상이한 목적 의식하에 이루어 졌으나,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 사이의 관계를 모색하는 데에는 유용한 자침을 제공해 준다. 특히 1990년대의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남한 체제 적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에서 상대적으로 고착되어 있거나 가변적인 층위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¹¹⁾ 그렇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멘탈리티의 구분이 명료하게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양자의 주요 측면들이 분산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연구들의 검토 위에서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를 ‘집단주의’, ‘운정주의’,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세 가지의 주요한 유형적 특질들로 구분하고자, 이 세 가지의 유형적 특질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각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¹²⁾ 구체적으로는 ① 각 멘탈리티의 정의와 이분법적 가치 체계를 구성

11)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전우택 · 이 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용상의 문제”, 이영선 · 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서울 : 오름, 1996) ;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사회과학 논총』(성신여대), 제8집(1995) ; 이장호 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서강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5)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영남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등 참조.

12) 이하에서는 편의상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적 특질들을 대체로 각각 별개의 멘탈리티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런데 실제 작업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유형들을 분석적 차원에서 분리시켜 검토하고자 한 시도는 필자의 능력상 썩 명쾌한 것이 되지는 못했다. 이는 적어도 공식적인 텍스트상으로는 이 유형들이

하는 요소들, 그리고 이 가치 체계의 상징적 자기 정화 작용 문제, ② 각 멘탈리티의 지속 여부와 그 정도에 관여하는 북한 사회의 물적(경제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 넓은 의미에서의) 토대 문제, ③ 각 멘탈리티와 해당 물적 토대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물(매개자)의 역할, ④ 그리고 각 멘탈리티가 현재의 심각한 경제 위기 국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³⁾

이 작업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고자 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탈북자 관련 조사 연구들과 일부 수기·증언 등의 공간 자료로서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 수록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던 탈북자들 면담 자료이다. 본문에서의 인용 전거와 관련하여 이 면담 자료들의 출처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면담 자료 a-A씨(50대 초반 대졸 남성). 1999년 11월 중순 필자 면담
B씨(40대 중반 대졸 여성). 1999년 10월 하순 필자 면담

'수령관'과 '유일 지배 체제'를 정점으로 한 최상급 가치 체계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고, 또 일상 생활 속에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는 데에서도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 유형들간의 상호 관계 설정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역시 필자의 능력상 처리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13) 이 글은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유지 기제를 밝히는 데 일차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 변동의 잠재적 또는 내재적인 요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즉 이 글에서는 각 유형적 특질의 멘탈리티가 물적 토대의 규정 하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른바 '상대적 자율성' 내지 '자율성'을 가지고서 물적 토대에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한 데에는 이른바 '토대-상부 구조론'의 '자율성'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 야기시키게 될 논의의 혼란과 비생산성을 피해보기 위한 의도도 부분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각 유형적 특질과 물적 토대 사이에 구체적인 매개물을 설정하고 이것에 때로는 암묵적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C씨(50대 중반 대졸 여성). 1999년 10월 하순 필자 면담
면담 자료 b¹⁴⁾—A씨(40대 초반 대졸 여성). 1999년 11월 초순 면담
B씨(40대 중반 대졸 여성). 1999년 10월 중순 면담
면담 자료 c—1999년 7월 중·하순 연변 지역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
필자 면담¹⁵⁾

- A씨(30대 후반 남성, 노동자)
- B씨(20대 중반 여성, 노동자)
- C씨(10대 후반 여성, 협동 농장원)
- D씨(30대 초반 남성, 조선족 현지 활동가)
- E씨(30대 후반 여성, 한인 교회 전도사)
- F씨(30대 초반 남성, 노동자)
- G씨(20대 후반 남성, 노동자)

면담 자료 d—1994년 12월~1995년 1월 면담¹⁶⁾

- A씨(60대 중반 남성)
- B씨(30대 중반 남성)
- C씨(30대 초반 남성)
- D씨(연령 미상 남성)

14) 이는 미래인력센터의 북한 여성·통일 연구팀에서 작성한 면담 자료의 일부로서 필자는 오유석 박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자료의 활용을 양해해 주신 오 박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15) 이 글에서는 북한으로 귀환할 의도를 갖고서 중국 연변 지역에 식량과 물자 등을 구득하기 위해 북한 지역을 이탈한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구분하여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지칭하려고 한다. 그러나 연변 지역의 이탈 주민들을 '탈북자'와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고 본다. 이런 사정 때문에 '면담 자료 c'의 피면담자들 가운데 일부는 '탈북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16) 필자가 최봉대·오유석, "은어·풍자어를 통해 본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문제", 『한국 사회학』, 제32집(1998)에서 활용한 면담 자료의 일부임.

III. 집단주의 멘탈리티와 사회적 통합의 한정성

1. 집단주의 멘탈리티 가치 체계의 차별적 통합 효과

집단주의는 사회 속의 개인이 집합체의 유기적 일부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과 존재 의의를 인식하고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 헌신과 자기 동일시를 강조하는 사회 심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이 공동체의 집합적 체험을 통해 공동체적 덕목을 갖춘 인격체로서 조직화되고, 공동체의 목표와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능적 담지자로서 자신을 투사시키는 성향을 뜻한다. 따라서 대중 수준에서 집단주의를 조직해 내고자 하는 국가나 지배 권력은 개인의 행동과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별성을 제거하고, 이런 역압적인 통제를 은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역이용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의 엄격한 ‘평등’과 ‘동지 의식’을 강조하게 된다.¹⁷⁾

집단주의 멘탈리티란 이와 같은 사회 심리적 태도가 주민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서 잘 드러난다.¹⁸⁾ 즉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대중적 구호에서 잘 나타나듯이, ‘운명 공동체 의식’, ‘상호 신뢰’와 ‘협동’,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적 태도’, ‘자기 희생’ 등 북한이 강조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이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

17) J. Schiedeck and M. Stahlmann, “Totalizing of Experience : Educational Camps”, H. Sunker and Hans-Uwe Otto eds., *Education and Fascism*(London : The Falmer Press, 1997), pp. 69~73 참조

18)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26쪽에서 재인용.

다.¹⁹⁾ 이런 가치들이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긍정적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중언 [1]에서, 그리고 국회의 과행적 운영을 보면서, “당은 하나만 있는 것이 국민 단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는 또 다른 탈북자의 견해²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남한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²¹⁾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자기 희생—개인 이기주의, 제일성—개별성, 집단적 규율—자유주의, 일원주의—다원주의, 질서—무질서>라는 이분법적 가치 체계 속에서 전자의 일극에 투사된 개인들의 사회적 가치 및 행위를 지향해 주는 사회 심리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기존의 지배 질서에 조응할 수 있는 일정한 상징적인 정화력을 갖게 되는데, 중언 [2]와 [3]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²²⁾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신과 동료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서 마침내 큰 건물을 완성하던 날 자신들 만의 힘으로 그 큰 건물을 완성했다는 기쁨으로 서로 불들고 울었다.’²³⁾

19) 이런 특징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적으로 집단주의 멘탈리티를 ‘온정주의’ 멘탈리티와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의 멘탈리티가 사회적 통합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적어도 분석적 수준에서 그 구분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전제하에서 한 개인이 자기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신격화’된 수령에서 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집단주의와 온정주의 멘탈리티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

20)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60쪽에서 재인용.

21)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27쪽에서 재인용.

22) 손기웅, “북한정신문화 연구”, 『평화통일연구』(세종대), 제2권(1996), 36쪽.

23)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31쪽에서 재인용.

(3) “그땐(1980년대 중반 무렵—인용자) 야간 충성 지원 돌격대에서 일하면서, 비록 일은 고되었지만 보람을 느꼈더랬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긍지가 있었지요.”²⁴⁾

그렇지만 실제로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아,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이 ‘개인 이기주의’라는 대극적인 가치를 부정하거나 위험시하는 인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핵심적인 대립적 구성 요소인 ‘자기 희생—개인 이기주의’라는 가치 체계의 자기 정화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왜냐하면 위의 증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탈북자들에게서 ‘자유주의—집단적 규율’이라는 이분법적 가치 체계의 내재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반면에 ‘자기 희생—개인 이기주의’의 이분법적 대립항 설정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집단주의 멘탈리티 형성과 평준화된 절대 빙곤의 삶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형성은 행위 주체로서 주민들이 체험하는 물질적 삶의 역사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통독 뒤 구동독 주민들이 자신들이 체험해 온 사회를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거나 갈취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움과 조언을 주고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²⁵⁾

24) 위의 글, 34쪽에서 재인용.

25) I. Ostner,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transition : The case of post-unification Germany”, H. Jones and J. Millar eds., *The politics of the family*(Aldershot : Avebury, 1996), p. 38 참조.

이처럼 구동독이 ‘희소성과 내핍’이라는 평준화된 빈곤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요청되었던 ‘기계적 연대’ 위에 성립된 ‘사회주의 게마인샤프트’였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집단주의 멘탈리티도 이와 유사한 경제적 조건 위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대가족’ 공동체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물적 토대는 주민들의 평준화된 절대 빈곤 수준의 삶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이 입은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에 따른 전후 복구 사업의 추진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1960년대 전반 까지 입당 목적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려고’ 한 데 있었다는 한 연로한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이 점을 엿볼 수 있다.²⁶⁾

주민들의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이런 물적 토대 위에서 1950년대 후반의 천리마 운동을 매개로 하여 형성·발전될 수 있었다. 천리마 운동은 공산주의 인간형을 창조하려는 정치 사상 교육과 실천적으로 결합된 대중 노력 동원 운동의 효시로서 1960년대의 ‘새기준·새기록 창조 운동’, 1970년대 이후의 ‘속도전’,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 등도 본질적으로 천리마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조직 생활의 형태로 진행된 대중 노력 동원 운동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핵심적인 매개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 생필품의 구득마저도 어려웠던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무렵까지 주민 생활의 일반적 상황이 초래한 ‘모두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등주의’ 의식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동원 태세를 유도함으로써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형성과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⁷⁾ 특히 조직 생활은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더불어 그들의 신체까지

26) 면담 자료 d)의 A씨 증언.

27) 한 연구자는 이런 빈곤의 절대적 평준화에 기초한 ‘평등주의’가 사회주의 사회 일반의 특징이었다고 파악한다. J. L. Curry, “The Sociological Legacies of Communism”, Z.

도 구속하는 힘으로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중요한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생활 초기에 살인 사건, 데모, 파업 등 일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잘못 왔다. 와서는 안 될 곳에 와버렸다”는 벤민으로 수개월을 보냈다는 한 탈북자의 소감²⁸⁾은 이를 시사해 준다. 이처럼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지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현재적 지형

1)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복원 시도와 그 불투명성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의 경제 위기가 주민들을 좀더 직접적으로 압박하게 됨에 따라 개인 차원의 대응으로서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적 상거래 행위와 더불어 ‘생계형 범죄’나 뇌물 수수 등 각종 일탈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 이기주의나 화폐 물신주의와 같은 반(反)집단주의적 의식과 태도가 확산되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고, 이런 추세에는 외화벌이 일꾼 등의 귀국에 따른 외부 세계의 ‘자유주의적 풍조’ 유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⁹⁾ 더구나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은 최악의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Barany and I. Volgyes eds., *The legacies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p. 70 참조.

28) 남북문제연구소,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서울, 1994), 22쪽에서 재인용.

29)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서울, 1994), 24~49쪽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1996), 35~38쪽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9), 112~

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런데 실제로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적어도 이미 1970년대 이후 점차 약화되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했던 탈북자는 주민들이 '1970년대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출세를 위해서 당원이 되었다'고 증언했다.³¹⁾ 다른 한 탈북자도 증언 [4]에서 보듯이 '나'와 '가족'을 위해서 집단주의 원칙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조국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은 50년대 생각이고, 70년대 80년대는 내가 건강해야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다, 내 몸은 조직의 몸이다, 이런 말은… 나를 주축에 놓고 보는 거예요… 총실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항상 가지고 있었다. 빠로도 알고 있었고, 충실히 않으면 잡혀가고 나중에는 집안이 망한다.”³²⁾

더 나아가 증언 [5]는 북한 사회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 규범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근본적으로 한 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볼 때 아마도 1960년대를

168쪽 등 참조

- 30) 이는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은어나 풍자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약화 경향과 관련이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최봉대·오유석, “은어·풍자어를 통해 본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문제” 참조 북한 정권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중 선전 매체를 통해 ‘공산주의 미풍 사례’를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또 면담 자료 c)의 E씨는 “교회가 돌보아준 탈북자들의 행실이 너무나 고약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데, 이를 깔끔하게 때문이라고 자기 정당화하거나 강변한다. 교회 관계자들이 민족적 수치감을 심하게 느낄 정도이다”라고 증언했다.
- 31) 면담 자료 d)의 A씨 증언. 다른 한 탈북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등중학교 시절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은 뒤로, 아버지는 입당하기 위해 술도 마시지 않고 김일성 저작 선집을 공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입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떳떳하다’고 말하면서 ‘밤새도록 우셨다’고 말했다. 면담 자료 d)의 B씨 증언.
- 32) 면담 자료 a)의 A씨 증언.

넘어서면서 주민들의 절대적 빈곤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부분적으로 이완되면서 가족 중심주의에 기초한 ‘출세 지향적 가치관’이 중요한 개인적 행위 지향의 준거점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와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유인력의 제공이나 사회 계층적 상승 이동의 원활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에 걸친 위로 부터의 대중 동원 체제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식주의적 동조의 비효율성도 늘었을 것이라는 점을 중언 [6]에서 알 수 있다.

(5) “이기심이나 경쟁심, 냉담함, 돈 위주의 생각 등(은)… 북한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특성이 체제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본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남한에서는 그런 것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³³⁾

(6) “북한에서는 ‘하는 척’하면 되지만, 남한에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박히면 사회 생활에서는 끝입니다. 여기서는 10배, 20배 열심히 뛰어도 성공할까 말까입니다.”³⁴⁾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대중 동원 운동의 진작 시도를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사회 통합적 효과와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해지는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을 선포하여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의 집단주의 원칙으로 난관을 극복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1999년에는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 작시키면서, 그 주요 실천 목표를 ‘모든 부문에서 황색 바람과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배격하고 집단주의적 생활 기풍을 확립’할 것에 두고 있다.³⁵⁾

33) 이장호 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149~150쪽에서 재인용.

34)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26쪽에서 재인용.

35)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선구자대회’ 보고 요지문(1999년 11월 3일)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참조

여기서 현재 북한 사회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것과 북한 정권이 1950년대의 천리마 운동과 마찬가지로 ‘사상 개조와 집단적 혁신을 결합’시키는 대중 노력 동원 운동을 재차 매개로 하여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복원을 꾀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위의 증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주민들의 물적 삶의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따라서 북한 정권의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복원 시도는 1950년대 후반이나 1960년대와는 다른 물적 토대의 성격 때문에 그 성공 가능성성이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식량 위기로 인해 대다수 주민들이 재차 평준화된 생계 유지의 한계선상에 내몰려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는 하나, 최근에 중국 연변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 [7]~[8]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가족 단위의 차별화된 생계 유지 전략이 일반적으로 추구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이미 일정하게 구조화된 북한 사회의 계층적 불평등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물적 토대의 제약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복원 가능성을 그만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7) “조국(에서는)… 전부 남의 것을 훔쳐먹고 빼앗아내는 판(이고), 형제간 사이에도 죽어가는 것을 못 본 척하는 세상(이다).”³⁶⁾

(8) “굶주려서 산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이제 ‘고지식한’ 사람은 거의 없고, ‘니 죽느냐 내 죽느냐’ 하는 형국이다.”³⁷⁾

36) 좋은벗들 역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 정토출판, 1999), 103쪽.

37) 면담 자료 c)의 A씨 증언. 여기서 ‘고지식한 사람’이란 사회주의적 도덕 규범을 원리 원칙대로 고수하다가 온 가족과 함께 아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1998년 2월 중국 연변 지역의 한 북한 이탈 여성도 자신의 올케가 ‘고지식하다 보니까’ 장사하려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아사했다고 증언했다. 강정구·법륜 역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 정토출판, 1999), 258쪽 참조 이 두 증언에서 절대 절명의 개인(가족)적 한계 상

동일한 맥락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 복원을 위한 매개적 역할이 새롭게 부여된 대중 노력 동원 운동도 중언 [9]~[10]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 효과 창출이 결코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또 중언 [11]에서 보듯 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동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던 '평등주의' 의식 역시 어느 정도는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⁸⁾

(9) “조국이 제대로 되겠지.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그 즉시에 우리도 질살겠지 하는 신

황에서도 북한 사회의 규범과 규율이 허용하지 않는 공유 재산의 절취나 비법적인 상거래에 나서지 않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생명력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아마도 극소수이거나 소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교과서적인 사회주의 인간의 전형이자 '김일성주의자'로서 충직한 삶을 살아온 한 40대 초반 여성 탈북자가 '기야 정신'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람이 먹는 문제가 이렇게 진짜 소중해요 먹는 것과는 타협 못해요 그 어떤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도..."라는 지적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면담 자료 b)의 A씨 중언.

- 38) 그런데 주민들의 평등주의 의식의 약화와 관련된 사회 정치적 함의를 고려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탈북자들의 계층적 성분에 무관하게 그들 대다수의 중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시피 북한 사회에서 평등주의의 의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아마도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국가에 의해 마련된 '표준화된 생애 경로'를 답습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체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도 그러하겠지만, 그들이 북한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해 온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초·중반의 20~30대 노동자 출신 탈북자들은 직업적 차별 의식과 더불어 일종의 귀속 요인에 따른 사회적 상승 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손기웅, "북한정신문화 연구" 참조 또 중언 [11]의 당사자 역시 중언 내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답변했다. 아마도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불평등 체계의 '임존'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불평등 의식은 덜 심각할지도 모른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 탈북자가 주민들이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다스려가는 간부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 사상식 각 오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빼먹어도 타고 들지 않아요"라고 지적한 점이나, 실제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당·정간부들의 경우 상호간에 생활 수준의 격차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중언도 참조할 수 있다. 면담 자료 b)의 A씨 중언과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33쪽 등 참조.

심으로 달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자.”³⁹⁾

(10) “조선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고난의 행군길도 끝이 없으니 이젠 더 버티기도 힘들고 갈수록 살길이 막막하다.”⁴⁰⁾

(11) “외국 원조 식량을 당 간부들이 착복하여 장미당에 유통시킨다. 기업소 당 간부들은 착복한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기업소에 판매하여 이윤을 얻어 축재하는 형편이다. 몇몇 사람들은 일주일분 또는 몇 달분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있고, 개인 재산을 불리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⁴¹⁾

2)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사회 통합의 한계

이상의 논의에 비춰볼 때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실제로 자기 회생과 개인 이기주의(또는 가족 중심주의)와 같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핵심적인 이분법적 가치 체계가 기존 지배 질서의 안정적 재생산에 조응할 수 있는 상징적 자기 정화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크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 회생=자기 이익=집단 이익’으로 체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정한 물질적 삶의 토대 위에서만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주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비물질적 힘으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1960년대 이후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 경제가 장기간 극단적인 한계 상황과 그에 따른 대다수 주민들의 평준화된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이상 이 세 가지 가치들 사이의 경계는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한 개인의 사회적 의식이나 행위를 규제하는 힘으로서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된 가치 체계 사이의 ‘성

39)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126쪽.

40) 위의 책, 128쪽.

41) 면담 자료 c)의 B씨 증언.

(聖)’과 ‘속(俗)’의 상징적 경계가 명확하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전제가 점차로 불안정해진 북한 사회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악화는 일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물질적 삶의 수준의 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화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집단적 규율’이나 ‘일원주의’ 혹은 ‘질서’와 같은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일부 ‘긍정적인’ 가치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구속력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⁴²⁾ 이는 곧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분리되거나 경제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인간 본성 개조 위주의 대중 동원 방식이 집단주의 멘탈리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매개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기 희생과 같이 집단과 조직의 집합적 이익 실현을 일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 통합에 좀더 유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일부 긍정적 가치들이 주민들의 물질적 삶의 수준이라는 물적 토대의 영향력을 좀더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이 점은 ‘나와 가족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4]의 증언자가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나 죄류탄 쏘는 것 텔레비에서 보면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 우선 혼란스러운 게 싫다”고 말한 데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의 의식 구조와 행위 양식의 이중성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의 ‘제2사회론적 접근에 관해서는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 나남, 1995) 참조.

IV.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상징적 자기 정화력

1.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종교적 결정화(結晶化)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정당화 양식으로서 온정주의는 대중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집단 심리를 그 본질로 한다.⁴³⁾ 이는 대중이 자기 성찰적인 행위 주체로서 자신을 설정하여 지배 권력과 양립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의 창출을 자발적으로 부정하고서 자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온전히 국가 권력에 위임하는 것을 뜻한다. 그 대신에 국가는 대중의 사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담보로 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후견자의 역할을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온정주의 지배 체제하에서 개인적 필요나 욕구는 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결여한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시혜와 관용의 형태로 실현되고, 이는 대체로 절대 권력자의 현시적 존재를 매개로 한 인격적인 지배 관계로 제도화된다.⁴⁴⁾

여기서는 이와 같이 절대 권력자의 권위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을 자유와 자율성과 창의성으로부터의 자원적인 도피라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개

43) 여기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개념 규정은 소비에트형 사회 지배의 한 정당화 양식으로 온정주의를 파악하고 있는 F. Feher, “Paternalism as a Mode of Legitimation in Soviet-type Societies”, T. H. Rigby and Ferenc Feher eds., *Political legitimization in communist states*(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온정주의를 소련 사회의 스탈린 사후 ‘비인격적인’ 집단 지도 체제의 독창적 고안물로 설정하고, 또 대중의 일상 생활의 탈정치화와 ‘암묵적인 동의’를 온정주의 주요 구성 요소로 파악하는 Feher의 가설은 소련 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북한과 같은 탈식민지 사회에 이런 문제 의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44) 이 경우 국가에 의한 개인의 온정주의적 포섭은 물질적인 시혜의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내재하는 가부장제적 위계 질서의 근본을 구성하는 부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효’)이라는 도덕적 규범의 사회 제도적 보장에 의해서 보강된다.

인의 사회적 잠재 의식의 지향을 온정주의 멘탈리티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온정주의 멘탈리티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필요나 욕구 실현의 좌절마저도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 그리고 숙명적 체념에서 귀책 사유를 찾는 수혜자 내지는 탄원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김일성주의’의 ‘무조건적 관철’을 위한 주민들의 무한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한 공식 문건의 다음 구절은 북한 사회에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도자 말씀’의 근저에 놓여 있는 온정주의는 극단적인 수사를 동원한 공허한 담론에 불과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의 멘탈리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⁴⁵⁾

“수령님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무한한 희생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그 것을 끝까지 집행하는 것입니다.”⁴⁶⁾

45) 이와 같은 절대 권력자의 ‘시혜’가 없이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는 ‘교시’의 현실적 구속력은 인민 학교용 교재에 실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품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다”라는 구절의 기계적인 암송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은룡, “조직생활 속에서 철몰랐던 인민학교 생활”, 『내가 받은 북한교육』(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55쪽 참조. 절대 권력자에 대한 충과 효의 결합은 기존 연구들에서 종종 언급되어 왔듯이, 온정주의 멘탈리티가 전통적인 기부 장제 가족 제도와 유교 문화의 유제에 의해 보강되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최재현, “북한사회이념 속의 전통적 요소”, 『동아연구』, 제14권(1988) 참조. 실제로 탈북자들은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모두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부모님의 절대 권위를 신봉하’거나 특히 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28쪽과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62쪽 참조. 참고로 덧붙이자면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자살할 ‘권리’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한 탈북자에 따르면 체제와 관련되지 아니한 순수하게 비정치적인 개인적 사유로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기지 않는 한 자살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유가족들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한다.

예컨대 1980년대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한 조사에서 이들은 ‘언제나 국가에서 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최선의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기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한다’라고 ‘한결같이’ 증언했다. 또 이들이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⁴⁷⁾ 1990년대 초중반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멘탈리티에서 온정주의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언 [1]은 온정주의 멘탈리티에 본질적인 행위 주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배제 및 자기 부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북한에서는 되는대로, 시키는대로, 줄서라 하면 줄서고, 박수쳐라 하면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인민 스스로가 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아 어떻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⁴⁸⁾

이와 같은 행위 주체의 성찰적 사유의 자원적인 중지는 주민들의 충성심과 경외심의 투사 대상이 되는 절대 권력자의 인격체적 지배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집착으로 결정화(結晶化)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⁴⁹⁾ 증언 [2]~[4]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6)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1991) : 전우택·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용상의 문제”, 43쪽에서 재인용.

47) 이문웅, 『북한체제 변화실태 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89), 14~15쪽 참조.

48)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26쪽에서 재인용. 이 점은 1992년에 여성 문제 세미나 참석차 방북했던 한 여성학 연구자가 만났던 북한 쪽의 어떤 인텔리겐치아 여성의 남한과 같이 ‘개인이 복잡한 모든 걸 해야 하는 곳에서는 살 자신이 없다’고 자인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신덕, “남북한 여성의 역할”, 여만월 외, 『와 헛바쿠를 돋네까?』(서울 : 다나, 1995), 144쪽 참조.

49) 설문의 선택지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종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 점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계춘,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결과의 재분석』(서울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55쪽 참조.

- (2) “무언가 믿고 따를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니 답답하다.”⁵⁰⁾
- (3) “모든 북한 정치가 철저히 종교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감사하고 따르고 충성하는 방법으로… 목숨은 버려도 수령은 절대로 못 버린다는 의식이 강하다.”⁵¹⁾
- (4) “우리 북한 사람들이 참 순진합니다. 외골수로 자랐기 때문에 김일성 괴뢰에서는 순진하게 충성을 다하지만은… 곧바로 가라 그러면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 가야 되니까 가죠.”⁵²⁾

이처럼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신뢰)—배신(불충), 이 상적인 무오류의 수범으로서의 지도자의 초월자적 위상—미력한 개인의 현실적인 과오 승인과 무력감>이라는 양극화된 이분법적 상징 체계의 원극의 전유 위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 [5]와 [6]에서 보듯이 이런 맥락에서 성화(聖化)된 존재의 혼신에 대한 심리적인 불경(不敬)의 시도는 피치자의 질서 정연한 세계관을 혼돈과 무질서로 해체시켜 나가기보다는 그런 시도 자체에 내재하는 두려움을 통해 잠재적인 ‘사상적 오염’을 순화시켜 성화된 존재에 대한 맹종을 공고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⁵³⁾

50)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27쪽에서 재인용.

51)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54쪽에서 재인용.

52) 면담 자료 b)의 A씨 증언.

53) 이 점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한결같이 강조해 온 것처럼, 한 개인의 생애 경로 전체와 일상적인 일과 생활의 시간표 전체를 봉인해 버리는 조직 생활과 그 속에서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되는 ‘교시’나 ‘말씀’을 준거로 한 자아 비판과 호상 비판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문제에 대해 행위 주체의 사회적 의식과 이것을 구속하는 멘탈리티 사이의 원형(proto-type)적 관계를 부각시키는 접근 전략을 취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암묵적으로 전제하거나 결과적으로 도출해 내는 ‘파악 사회화’된 파동적 행위자로서의 북한 주민의 상(像)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 (5) “남조선이 진짜 아이들과 라지오에서 나오는 대로 잘살까 하는 의혹과 남조선에 한번 가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사상적으로 병이 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소스라쳐 놀라군 하였다.”⁵⁴⁾
- (6) “항상 어릴 때부터 김일성 혁명 사상을 잘 외웠고, 김일성을 위대한 아버이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처음으로 김일성이 정말 신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순간 무서움이 확 밀려오면서 나락에 떨어지는 느낌이었다.”⁵⁵⁾

이처럼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가치 체계는 명확하게 경계지어진 ‘선·악’의 이분법적 상징 작용 위에서 ‘선’(절대 권력자와의 자기 동일시)이 ‘악’(지도자로부터의 탈동일시)에 의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인식 그 자체만으로도 피치자가 지배 질서 안에서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게끔 하는 강력한 자기 정화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온정주의 멘탈리티와 현지 지도

1)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매개자로서 절대 권력자의 위상

북한에서도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물적 토대는 여타 사회주의 사회에서 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물질적 생활의 보장에 있고, 또 이는 주민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대행할 절대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증언 [7]은 이런 관계를 단적으로

54) 여은룡, “조직생활 속에서 철물랐던 인민학교 생활”, 79쪽. 이는 10대 후반의 한 탈북 청소년이 집에서 몰래 남한 방송을 수차례 청취하던 중에 겪게 된 감정적 체험에 관한 수기의 일부분이다.

55)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26쪽에서 재인용.

보여준다.

(7) “북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자유만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⁵⁶⁾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기제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즉 주민들의 온정주의 멘탈리티에서는 ‘항일 투쟁과 전쟁과 (전후 복구) 건설에서 보여준 비범한 영도력에 대한 친정한 존경과 신뢰’⁵⁷⁾라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 과정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절대 권력자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과 경외심의 투사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매개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김일성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는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의 보장이라는 경제 체제의 원활한 운용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중언 [8]의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엘리트’ 출신의 한 탈북자가, 김일성이 주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그의 약속을 굳게 믿고 따르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저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에 있었더라면 아마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고 따르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⁵⁸⁾

56) 위의 글, 22쪽에서 재인용. 이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갈등 발생 소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한 탈북자의 단호한 답변이었는데, 필자도 1997년에 행한 한 면접 조사에서 이런 평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57) 최익환, “귀향”, 양은식 편, 『분단을 뛰어넘어』(서울 : 고려연구소, 1984), 35쪽 참조.

58)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26쪽에서 재인용. 식량 위기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이전인 1990년에 탈북한 또 다른 한 유학생 출신 ‘엘리트’(그는 북한에서 살았던 20년 동안 22번이나 각종 혁명 사적지와 혁명 전적지를 ‘순례’했다고 한다)는 탈북 이전의 생활과 관련하여 대중 매체에 소개되는 아프리카 지역의 대량 기아 사태를 떠올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먹어서) 다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그래도

(8) “김일성에 대해서는 마음속의 신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운다. 김일성이 죽은 뒤에 사람들이 동상 앞에서 우는 것은 99%는 진짜이다.”⁵⁹⁾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의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통제 경제 체제의 운용이라는 물적 토대의 파규정적 매개자로서의 절대 권력자의 위상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과 더불어 이 물적 토대로부터 일정하게 자립화되는 ‘아버지 수령’의 현시적 존재에 의해 지속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매개자이자 부분적으로는 그 자신이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근원으로도 작용하는 절대 권력자의 이중적 위상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대중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정의되는 ‘현지 지도’를 통해 극적(劇的)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김일성은 1950년대 말 북한 경제 체제가 직면했던 구조적 한계를 ‘수령의 직할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현지 지도 방식에 의해 ‘돌파’하려는 과정⁶⁰⁾에서 집단주의와 결합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물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제 부문의 현지 지도를 통해서 김일성은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완벽한 이해와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전능한 존재로 부각되었던바,⁶¹⁾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현지 지도를 받는 곳은 영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의 영도에 의해 위대한 사람을 데리고 있기에 우리는 그래도 諸 어 죽지는 않고 산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송경현, “북한의 실상과 사회과교육의 과제 : 귀순 대학생 정현과의 대담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26집(1993), 342쪽.

- 59) 면담 자료 d)의 C씨 중언. 물론 이런 평가에는 중언자 개인의 주관적인 편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필자가 면담했던 한 탈북자만 하더라도 이런 평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은 취했다. 면담 자료 b)의 B씨 중언 참조 단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지배 권력의 정당화 양식으로서의 온정주의가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는 멘탈리티로 전화하게 되는 맥락을 그리한 지배 양식의 수용 주체인 주민들이 그들의 사회적 의식 수준에서 이를 형상화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 60)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성균관대 정치과 박사 학위 논문, 1996), 제3~4장 참조
- 61) 류호열, “김일성 ‘현지지도’ 연구 :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팡스러운 곳'이라는 한 탈북자의 인식⁶²⁾은 이 점을 뒷받침해 준다. 그렇지만 현지 지도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의 발의 주체로 설정되는 대신에 현지 지도의 한정적인 경제적 성과의 수혜자 위치에 머무르게 됨으로써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좀더 강력한 담지자로 전화되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2) 현지 지도의 이율 배반적 효과와 인격적 지배의 승계

현지 지도는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에 있어서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지 지도를 통한 경제 체제의 운용은 주민들의 '창발성'을 배제함으로써 비효율성과 무력함의 노정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³⁾ 이런 맥락에서 현지 지도를 매개로 형성·강화되어 온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주민들이 절대 권력자와의 관념적인 일체화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지물로 역할해 왔지만, 그와 동시에 온정주의 멘탈리티 자체의 물적 기반을 점차로 침식하게 된 이율 배반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는 두 가지 사실과 결합하여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일단은 주론해 볼 수 있다.

1호(1994) 참조

62) 면담 자료 d)의 D씨 증언.

63) 현지 지도의 '주홍성과 비현실성'은 온정주의 멘탈리티를 배태하는 온정주의 지배 체제에 본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류호열, "김일성 '현지지도' 연구 : 1980~90년 대를 중심으로", 225쪽 참조. 온정주의 지배 체제에서는 절대 권력자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적 시혜는 많은 경우 그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본보기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나락벌' 건설 정책의 실태에 관해서는 이우홍, 『가난의 공화국』(서울 : 통일일보사, 1990) 참조. 또 이 점을 수령제와 결합된 북한의 공장 관리 체제 '경제 위기의 구조화'라는 측면에서 논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 참조.

그 하나는 1990년대 후반 식량 위기의 전면적 현실화로 인해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물적 토대가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사회 형성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격적 지배 관계 그 자체가 부분적으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토대로도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1994년의 절대 권력자의 교체가 초래했을 부정적인 효과와 관련된다. 이와 같이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그 지속 정도를 검토하는 작업은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기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격적 승계와 결합된 현지 지도가 여전히 온정주의 멘탈리티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인데, 김정일도 김일성 사망 직후 수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현지 지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99년 들어 군 부문과 더불어 경제 부문의 현지 지도도 강화하기 시작한 김정일은 같은 해 3월에 강원도 ‘농촌 기계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식의주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인 농업 전선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⁶⁴⁾ 또 같은 달에 개최된 ‘김일성의 합경북도 현지 지도’ 40돌 기념 보고회에서는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김정일만을 믿고 따르는 충신, 효자로 준비해야 할 것이며 김일성의 지시를 계속 관철하여 영도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되었다.⁶⁵⁾

이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김정일은 현지 지도를 현재의 식량 문제를 포함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 파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서 간주하고 있고, 김일성의 후광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지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김정일 역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을 위해 현지 지도의 매개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64) 중앙방송, 1999년 5월 7일 ; 국정원, <http://www.nis.go.kr>

65) 보고자 미상, 중앙방송, 1999년 3월 24일 ; 국정원, <http://www.nis.go.kr>

을 알 수 있다.⁶⁶⁾

그런데 현지 지도의 이율 배반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한 검토만으로는 김정일 정권하에서 온정주의 멘탈리티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는 분명하게 평가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에 부정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의 작용과 관련해 보더라도 온정주의 멘탈리티에 어떤 유의미한 질적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⁶⁷⁾ 아래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몇몇 자료들에 의거해서

66) 이 점은 전적으로 동료 연구자의 지적에 힘입은 것이다.

67) 북한 체제의 권력 승계나 '김정일 지도자론'에 관한 북한 주민들의 규범적 승인 문제를 검토한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권력 승계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은 두드러지지 않고, 또 김정일의 지도력은 김일성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기는 하지만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평길, 『남북한주민의 의식구조비교』(서울 : 국토통일원, 1986), 30쪽 ; 남북문제연구소,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 81쪽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38~43쪽 ; 이종석,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35쪽 참조. 이종석, 위의 글, 36쪽에서는 김정일의 지도력이 일정 정도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 이유로 체제 위기의 원인을 중간 관료층이나 당의 중간 간부층의 탓으로 돌리는 공식 담론을 들고 있는데, 이는 여타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스탈린 시대 시기의 소련이나 '차우세스쿠주의'하의 루마니아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런 양상은 온정주의 지배 체제가 성립되어 있는 사회에 공통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R. W. Thurston, "Social Dimensions of Stalinist Rule",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24, no. 3(1991), pp. 550~554와 T. Gilberg,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Romania*, pp. 104~105 참조 참고로 덧붙이자면, 북한 사회에서 이런 지배 양태는 단지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컨대 한 탈북자는 자신의 직·간접적 체험에 비춰서 "북한에는... 상충류라는 게 정말 한줌도 못 되죠... 권력이라는 건 웃사람이 '저거 나쁜 놈이네' 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 하고 또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불완전하죠"라고 말했다. 면담 자료 b)의 B씨 증언. 또 다른 한 연구는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한 탈북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한 '현실적인 대안 부재론'을 그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42쪽 참조. 그런데 흥미롭게도 종편계 출신의 한 연구자가 면담한 2세대 종편계 교포도 동일한 맥락에서 일종의 '김정일 대세론'을 피력했다. S. Ryang, *North Koreans in Japan :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Boulder : Westview Press, 1997), p. 158 참조 또 구소련 사회에서 "국민은 스탈린을 특별히 잔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현재적 지형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식량 위기와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현재적 지형

‘북한의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이가 요구‘한다면’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신’의 길을 걸어온 한 탈북자는 친족의 아사를 실례로 들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해 [9]와 같이 증언했다.

(9) “김일성이가 있을 때에는… 관심이 있어서 하다 못해 무슨 군수품을 팔아서라도 굽지 않았어요… 김일성이가 사망되고는 김정일이가 돼가지고는 3년이 되니까 겉잡질 못 하겠더라구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다 충복하고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 하는데 나라가 더 거지같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너도나도 다 죽는 거야.”⁶⁸⁾

이 증언에서 절대 권력자와의 자기 동일시를 통해 물적 토대로부터 자립화되어 있는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양극화된 이분법적 상징 체계가 인격체로서의 절대 권력자의 교체를 계기로 동일한 이분법적 구조를 유지한 채 전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멘탈리티의 반전은 증언자의 특수한 개인적 체험(피체와 혹독한 고문)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변 지역 북한 이탈 주민들의 수기 증언집(좋은벗들 엮

인한 황제, 그러나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황제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 Besancon, *Court Traite de Sovietologie à l'usage des Autorites Civiles, Militaires et Religieuses*(Paris : Hachette, 1976) ; 정낙중 역, 『공산주의 본질 : 소련사회현상의 이론적 비판』(서울 : 형설출판사, 1981), 21쪽 참조.

68) 면담 자료 b)의 A씨 증언.

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현재적 지형을 살펴보는 데 일정하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수기 증언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⁶⁹⁾ 이 증언들을 검토해 볼 때 온정주의 멘탈리티와 유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⁷⁰⁾

1)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온존·잠재적 균열 경향

첫번째 유형의 주민들은 증언 [10]~[14]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의 구제 조치, 즉 시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과 체념적 수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주민들은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10) ‘조국에서 배급이 회복될 때까지 중국에서 비렁뱅이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57)
(남, 17, 미상, 부분 해체, 이탈→부 치료비 마련 목적)
- (11) “조선의 정부여! 하루빨리 회복되어 불쌍한 우리들을 살려달라.”(83) (여, 23, 청진시, 완전 해체, 이탈→인신 매매형 혼인)
- (12) “우리 조선 정부에서 백성들을 밥만 먹여줘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리겠

-
- 69) 이 수기 증언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출신 지역, 이들이 ‘도강’했다는 사실 그 자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남한’의 민간 단체와 접촉하여 도움을 받는 자리에서 이 증언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들의 실재적인 사회적 의식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한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의식을 구속하는 잠재 의식 수준의 규정력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최소한도의 유용성을 있다고 본다.
- 70) 증언 인용 부분 말미의 () 안의 숫자는 원자료의 인용 쪽수를 뜻하고, [] 안의 내용은 ‘성별, 연령, 북한 내 거주지, 가족 해체 여부, 이탈·탈북 여부와 그 사유’ 순으로 정리한 것임.

는가?"(65) (여, 24, 회령시, 유지, 탈북→인신 매매형 혼인)

(13)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도 아니다. 집식구들을 살리려고 비법 도강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가서야 랑식난이 해결될 수 있겠는지?"(137) (남, 46, 신천군, 완전 해체, 이탈→가족 부양 목적)

(14) "어느 때 가면 북한 땅도 중국처럼 식주가 해결되겠는지. 이 몸에 흙이 덮이기 전에 그날이 오겠는지.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는 바이다."(132) (남, 61, 은덕군, 완전 해체, 이탈→아내 병사)

그러나 이들은 "보통 날에는 좋다가도 어려운 날에 마음을 달리하는 것을 배신 행위로 보며, 대세와 추세에 따라 변하는 배운 망덕한 행위를 제일 경멸한다"는 김정일의 '경고'⁷¹⁾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절대 권력자에 대한 '불충'을 범한 셈이다. 이는 곧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이분법적 상징 체계의 구속력이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상징 체계의 '자기 정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국 이탈('도강')이 '비법적' 행위임을 자인하면서도, 이로 인해 심리적 혼돈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이를 아사의 모면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다고 자기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들의 기본 생활의 보장 책임을 져야 하는 전능한 존재로서의 절대 권력자의 위상이 현실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탈신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이 유형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온존하거나 잠재적인 균열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1) 중앙방송, 1999년 6월 2일 ; 국정원, <http://www.nis.go.kr>

2)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현재적인 균열·잠재적인 해체 경향

두번째 유형의 주민들은 증언 [15]~[17]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 위기의 원인을 현재 '지도자'의 자질 부족이나 무능에서 찾으면서, 지도자(지도총)의 각성을 촉구하거나 새로운 유능한 지도자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첫번째 유형과 차이가 난다.

(15) "조선 땅에서는 근본 몰랐는데 중국에 와 텔레비로 보고 듣고 하니 제일 못사는 나라가 우리 조선인 것 같다… 문명하던 조선은 지금 환경이 깨끗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 무슨 동원도 모두가 회피하고 먹을 것 찾아 헤매는 것이 급선무다… 조선 관리인들이여! 각성하여 나라를 구하라!… 정부 차원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는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가슴 아파한들 평백성이 무슨 힘이 있는가?"(122~123) (남, 36, 부령군, 부분 해체, 이탈→가족 부양 목적)

(16) "지금 우리 조국은 기난하여 인민들을 먹여살릴 수 없는 정황이어서… 아무 데도 먹을 곳 없는 집은 집식구가 모두 굶어죽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살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구성(지도자)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는지."(109) (여, 37, 청진시, 유지, 이탈→가족 부양 목적)

(17) "나는 조국에서 군대에도 갔다 오고 대학 공부도 했지만 이 모든 능력도 발휘할 래야 할 기회도 없고, 량식난은 우리를 절반 머저리로 만들었다… 우리 조국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못사는지? 기층 인민들의 생활난을 중앙 간부들은 알고 있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의문들이 풀리지 않는다."(120~121) (남, 45, 법동군, 부분 해체, 이탈→가족 부양 목적)

그러나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지도자에 대한 복종심과 타을적인 피지배 관계로 대체하고 있다. 즉 이들의 경우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구조화된 지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적 의식은

제한적이 되고, 온정주의 지배 체제에 대한 도구적 비판 의식을 넘어서지 못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주민들은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현재적인 균열 내지 해체 경향의 잠재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해체 경향

세번째 유형의 주민들은 ‘영도자’ 지도 체제 외부에 온전한 자기 성찰적 의식을 지닌 자율적인 주체로 자신을 위치지으면서 온정주의 지배 체제의 본질을 간파하고(증언 [18]), 그 대안까지도 상정하고 있다(증언 [19]). 따라서 이 유형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해체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사람에겐 그 어떤 자유도 없는 것이 조선인 것 같다… 중국에 와보니 언론 자유, 인신 자유…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만 있으면 돈도 쉽게 벌 수 있는데 우리 조국에는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조금만 잘못하면 갖가지 모자(누명)를 씌어 추방이요, 반동 언론이요, 당에 대한 중상이요 하며… 정치 모자만 쓰면 온 가족 친척까지 못살게 되니 끝장이 다.”(158) (남, 47, 은덕군, 완전 해체, 탈북→첫 이탈 후 귀환시 피체)

(19) “조선 자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령도자 자체의 무능성이 더한층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고, 사회주의 우월성이란 이런 것인가? 인민들은 단속하고 자기네는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아무 짓이나 다 하여 뢰물받는 데는 이름이 있다… 이대로 지탱할 바엔 전쟁으로 결속을 짓는 것이 제일 유일한 방법이 아닌지? 군대 자체도 굽주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쟁하면 죽는 것 역시 백성이니, 남북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불붙듯 해도 우리로서는 별수가 없다.”(107) (남, 37, 청진시, 완전 해체, 탈북→첫 탈북 시도시 피체, 혹독한 고문)

그런데 수기 증언들 전체를 검토해 볼 때 이 유형의 주민들은 대체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위의 두 유형의 주민들과는 다른 특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은 애초부터 가족이 완전 해체된 처지에서 이탈이 아닌 탈북을 의도했거나, 수차례의 이탈과 귀환 과정에서 피체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경우들이 일반적이라는 점이다.⁷²⁾ 따라서 아사나 병사로 인한 가족의 완전 해체나 피체에 따른 가혹한 처벌 등이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해체에 작용하는 주요 변수들 가운데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도·농이라는 거주 지역의 차이, 연령대, 성별 등을 이 수기 증언들만을 놓고 볼 때에는 별다른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볼 때 세번째 유형의 주민들이 전체 주민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⁷³⁾ 동일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증언 [20]과 [21]은 이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다. 또 위의 첫번째 유형에 속하는 증언들은 ‘이국’이라는 자리 공간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증언자들의 피차별과 설움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을 뿐 기실 [20], [21]과 동일한 지평 위에 놓여 있다. 이는

72) 위의 증언 [9]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체제 동조적 삶을 살아온 탈북자(면담 자료 b)의 A씨에게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73) 그렇지만 이들도 온정주의 멘탈리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두번째 유형의 증언 [15]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언 [19]에서 주민들을 ‘인민’이나 ‘공민’이 아닌 ‘백성’으로 동일시하는 데에서 시사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필자가 연변 지역 방문시 대화 할 기회를 가졌던 조선족 사람들은 자신들을 한결같이 ‘중국 공민’이라고 지칭했다. 참고로 종전 직후 폴란드 사회의 언어 사용 규칙이 기본적으로 가·부의 가치 판단만을 함축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비판적 성찰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J. T. Gross, “Social Control under Totalitarianism”, D. Black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Control*, vol. 2 (London : Academic Press, 1984), pp. 73~74 참조 또 스탈린 지배 체제의 ‘언어 정치’에 관해서는 A. Besancon, *Court Traite de Sovietologie à l'usage des Autorites Civiles, Militaires et Religieuses*, pp. 29~48 참조 이와 유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북한 지배 권력의 ‘담론’을 분석한 글로는 전효관, “북한 정치 담론의 의사소통구조와 전략”,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참조 또 이런 연구들과는 달리 언어의 수행적(performative) 역할과 종류에 조선인들의 민족 정체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S. Ryang, *North Koreans in Japan :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도 참조

곧 위 세 가지 유형들 중 첫번째 유형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증언 [22]와 [23]은 두번째 유형의 도구적인 비판적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또 [20], [21]과 비교해 볼 때 이 유형의 주민들이 첫번째 유형의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20) “주민들은 ‘장군님이 미군이 6·25 당시 북한 지역 땅 속에 숨겨놓은 식량을 찾고 계시는 중이고, 이 식량만 찾으면 식량 위기는 해결된다’는 식의 선전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도 하다.”⁷⁴⁾

(21) “비록 주민들 사이에 식량 불만에 관해 가벼운 토로가 나오기도 하지만, ‘굶어 죽어도 우리 장군님만 믿는다’는 식이다.”⁷⁵⁾

(22) 김일성 때보다 못하다거나 지금 힘들거나 어렵다는 식으로 종종 주민들이 언급하기는 하지만 김정일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다.⁷⁶⁾

(23) “주민들은 김정일 장군이 식량 배급을 잘하도록 지시했지만 중간 간부층이 부정착복하기 때문에 못산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내심으로는 독재가 심하다고 생각한다.”⁷⁷⁾

여기서 위 증언들이 대체로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한 조건(북한 내의 여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강’이 용이하고,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과 유포가 수월하다는 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북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도 첫번째 유형의 주민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법하다.

74) 면담 자료 c)의 D씨 증언.

75) 면담 자료 c)의 A씨 증언.

76) 면담 자료 c)의 B씨와 C씨 증언.

77) 면담 자료 c)의 B씨 증언.

4)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상대적 지속성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와 세번째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 권력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그 본질로 하는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주민들의 물질적 기본 생활의 보장이라는 물적 토대(현실적인 전제 조건)로부터 자립화하여 그 자체만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어 온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이런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사회적 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유효한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첫번째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집단주의 멘탈리티와는 달리 현재의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균열을 억제하는 데 일정하게 유효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위기 국면 도래 이전에는 온정주의 멘탈리티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일 수 있었던 주요한 일 근거가 온정주의 멘탈리티에 내재하는 이분법적 상징 체계의 자기 성화력에 있었다고 한다면, 위의 중언들에 대한 전체적 검토에서 드러나듯이 현 국면에서 그런 자기 정화력은 적지 않게 약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사회 통합적 구속력은 이전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온정주의 멘탈리티가 수년 동안 지속된 위기 국면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담보해 준 일차적 요인이라는 평가는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집단주의나 온정주의보다도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통합해 냄으로써 현재의 위기 국면이 체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해 온 멘탈리티의 또 다른 특질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할 차례이다.

V.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와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

1.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와 상징적 폭력

섬너(W. G. Sumner)는 ‘우리 집단 내의 우애와 화평은 타자 집단에 대한 적대감과 전쟁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우리 집단에 대한 충성과 희생, 국외자들에 대한 증오와 경멸, 내부를 향한 형제애, 외부에 대한 전쟁 상태는 동일한 상황의 공통된 산물로서 공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⁷⁸⁾ 이는 ‘우리 집단’이 ‘그들 집단’과의 상호 긴장적인 역관계 속에서 공세적이거나 방어적인 집단적 태세를 갖게 되고, 그런 집단적 태세의 극점에 전쟁 상태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 집단’을 민족 국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운명 공동체로 치환하면, 민족 국가의 성원들은 집단적 사회 심리 수준에서 민족 국가의 이상이나 현실에 대한 충성심을 내재화하고,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의 우월성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고, 민족의 통일성과 독립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⁷⁹⁾ 탈식민지 사회가 민족 국가로 형성·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그 사회 성원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게 되는 이런 집단적인 잠재 의식을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이하 자민족 중심주의로 약칭) 멘탈리티로 규정하고자 한다.

애국주의는 민족 국가 성원들의 강력한 결집과 유대 관계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일차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애국주의는 민족 국가의 성원들이 수세대에 걸쳐 생활해 온

78) L. W. Doob, *Patriotism and Nationalism : their psychological foundations*(New Haven : Yale University, 1964), p. 249 참조

79) *Ibid.*, p. 4 참조

공간이자, 그들을 민족으로 결속시켜 주는 체험을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조국’⁸⁰⁾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군사적 수단에 의거한 민족 국가의 ‘안보’, 즉 영토 보전을 지향하게 된다.⁸¹⁾

이처럼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핵심적 가치로서 애국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맥락 속에서 여타의 가치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다음 두 가지의 공식적인 담론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에서도 애국주의의 이런 특질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한 정권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민족 제일주의’의 가치하에 ‘전국적 판도에서 조선 민족의 영예를 높히 떨쳐야 한다는 민족적 사명감을 깊히 자각하고 조국 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⁸²⁾ 또 1990년대 초반에는 주한 미군을 연결 고리로 하는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 군사 동맹 체제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하며, 원수들

80) A. Staab, *National identity in Eastern Germany*(Westport : Praeger, 1998), p. 13 참조.

81) 단순화시키자면 애국주의는 대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세적이거나 방어적인 지향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고, ‘자유, 주권, 자주성, 해방, 독립 등’의 가치하에 전쟁도 불사한다는 신념과 ‘반역 행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신념’이 그 각각의 지향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L. W. Doob, *Patriotism and Nationalism*, pp. 136~137 참조. 이런 신념의 남지자로서 민족 국가의 성원들은 민족 정체성에 의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인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일차적으로 스스로를 귀속시키는 경계지어진 영토에 대한 감정적 지향의 구체적인 표상으로서의 ‘영토 정체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는 영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형상화된 사회 심리적 힘으로서 민족 정체성은 개인의 여타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섭해 낸다고 볼 수 있다. G. Csepeli, *National Identity in Contemporary Hungary*, trans. by M. D. Fenyö(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p. 242 ; A. Confino, *The nation as a local metaphor*(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p. 7 참조.

82)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히 발양시키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문헌집』(1992)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마산 :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293쪽에서 재인용.

의 오만 무례한 간섭과 침략 책동에 언제나 단호하게 맞서 나가야 한다”⁸³⁾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북한 정권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는 조국 통일의 실현이라는 공세적 측면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분쇄에 의한 조국 보위라는 방어적 측면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여 전자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도 통일 지향성이, 그리고 후자의 측면에서는 조국 보위 결의가 애국주의의 구체적인 요체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들을 전제하고서 탈북자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할 경우,⁸⁴⁾ 대체로 세 가지의 가치가 북한 주민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주된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근본적 가치로서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충성과 배반이라는 추상적인 이분법적 가치 체계 속에서 설정되고 있는데, 탈북 직후 한 탈북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증언 [1]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⁸⁵⁾

(1) “북한에서 배반자로 부를 것 생각하니 죄책감을 떨칠 수 없다.”⁸⁶⁾

그 다음으로 애국주의의 구체적인 현실태(現實態)로서 자주적인 통일 지

83) 『로동신문』, 1993년 6월 3일자 사설; 이석호, “남북한 국가관·대외관의 갈등양상”,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극복방안 연구』(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05쪽에서 재인용.

84) 안계춘,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결과의 재분석』, 29쪽;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59쪽;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37~57쪽 참조.

85) 애국주의와 집단주의는 ‘조국’이라는 대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준거점이 설정되는 맥락에서 차이가 난다. 집단주의는 자기 완결적인 관념적 실재로서의 조국에서 준거점을 구하지만, 애국주의는 타민족 국가(제국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조국의 준거점을 구한다.

86) 김영수,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44쪽과 52쪽에서 재인용.

향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가치를 들 수 있다. 이는 조국 통일의 주체로서 북한이라는 아방과 분단 고착화를 획책하는 ‘미제국주의’를 타방으로 설정하는 대립항적 구도에 조용하는 이분법적 상징 체계의 일극을 차지하는 가치로서 탈북자들이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미군 주둔’을 남한 사회 취약점의 하나로 지적하는 데에서 엿볼 수 있다.⁸⁷⁾ 그런데 위의 공식적인 담론에서 북한 주도 통일 지향성과 조국 보위 결의가 맞닿아 있듯이,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보로 표상되는 한정된 지리적 공간의 보전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즉 자주적 통일 지향성과 조국의 ‘영토 정체성’의 고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증언 [2]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 “북한 사람들이 내 조국이 귀중하다, 조국에 그런 애국심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 그게 딱 몸에 배어서 머리에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은 내 조국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조선은 우리 조국이라 생각하지 남조선을 통틀어 조국이라 이렇게 생각 잘 안하지요.”⁸⁸⁾

또 다른 한 가치는 민족적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주적 통일 지향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지상 낙원’ 북한과 대비되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남한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기초한 북한 주민들의 고정 관념 속에서 잘 드러난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후의 탈북자들은 대다수가 남한 사회에 대해 ‘시위·무질서 등으로 인한 혼란, 외래 문화의 유입 및 성문제 등으로 인한 퇴폐, 빈부 격차, 이기주의’ 등과 같은 고정 관념을 갖고 있다. 이런 민족적 자긍심은 한 탈북자의 증언 [3]과 같은 인식에서 잘 드러난다.

87) 위의 책, 39쪽 참조

88) 면담 자료 a)의 C씨 증언.

(3) “KBS의 「시민광장」에서 북한을 거지로 빗댄 귀순자의 발언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나중에 만나면 혼을 내주어야겠다.”⁸⁹⁾

이상의 검토에 비춰볼 때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는 <애국주의(조국 충성)—조국 배신, 자주적 통일 지향성—[외세의 분단 고착화→외세 주도 통일], 민족적 자긍심—민족적 수치심>이라는 이분법적인 상징적 가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이분법적 상징 체계가 창출하는 자기 정화 효과는 무엇보다도 애국주의의 구체적인 현실태적 가치로서 자주적 통일 지향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다.⁹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에서 미국·일본·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화는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에서 미국이나 남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제거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⁹¹⁾ 이는 이들 나라가 주도하는 통일은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의 기저에 놓여 있는 애국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조국의 영토 보전이라는 성화된 상징을 먼저 부정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에 있어서 주민들은 그런 부정적인 상징을 매개로 하여 자주적 주권체로서 북한 체제의 ‘오염’ 가능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 정화한다기보다는 상징화된 이 대상들을 향한 무의식적인 격렬한 증오와 공포감을 드러낸다. 증언 [4]~[7]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증오와 혼재되어 있는 공포감은 그 본질에 있어서 지배 권력이 주민들을 포획해 내는 무형의 상징적인 폭력에 다름 아니다.⁹²⁾

89) 김영수,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55쪽에서 재인용.

90) 애국주의 자체의 상징적 자기 정화 효과에 대해서는 이 추상적 가치의 실현을 매개하는 역사적 기념물의 역할과 관련해서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91) 면담 자료 a)의 A씨와 B씨 증언. 위의 이분법적 상징 체계에서 ‘[외세의 분단 고착화→외세 주도 통일]’을 팔호로 둑은(epoche) 이유는 여기에 있다.

(4) “또 미국인과 ‘사업’을 하다 그들이 저지른 ‘신천 만행’을 생각하니 적개심과 복수심이 끊는 것을 참기 어렵다. 미국놈에 대한 복수심이 솟는다.”⁹³⁾

(5)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적은 미국입니다. 제 일 나쁜 사람 하면 제일 처음 미국놈, 두번째는 일본놈, 세번째는 북한말로 하면 남조선 괴로 도당이라고 합니다.”⁹⁴⁾

(6) “남한은 쉽게 말하면 무서운 사회, 그 사회에서는 살아 갈 수 없는 사회라는 인식이 머리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남한으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한에 가게 되면 우리 부모는 수용 시설에 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에 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⁹⁵⁾

(7) ‘남한에 가면 죽는다고(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⁹⁶⁾

이렇게 볼 때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은 멘탈리티 수준에서 ‘외세 주도 통일’이라는 부정적인 대립항과 직접적인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대신에 영토 정체성이라는 성화된 상징과 중첩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부정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상징적 자기 정화 효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은 조국의 상실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사

92) 증언 [4]는 한 탈북자가 입국한 뒤 유관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미국인 심문관을 접했을 때 내보인 심리적 반응이고 증언 [6]은 다른 한 탈북자가 러시아 체류중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93) 김영수, 『탈북 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47쪽에서 재인용.

94) 송경현, “북한의 실상과 사회과교육의 과제”, 338쪽. 한 유학생 출신 탈북자는 군사 훈련을 할 때 ‘첫째 실단은 미군, 둘째 실단은 일본군, 셋째 실단은 한국군에게 항해 쏘라는 명령하에 사격을 하였다’고 증언했다. 남북문제연구소,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 61쪽 참조. 이런 유형의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반복 학습은 특징한 멘탈리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 사회 형성 과정의 역사적 맥락과 떼어놓고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95) 이장호 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152쪽에서 재인용.

96)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60쪽; 면담 자료 a)의 A씨와 B씨 증언.

악한 상징에 투사되는 증오와 공포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극적인 자기 정화 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후 북한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물적 토대와 그 매개물에 대한 견토를 통해 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2.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와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

흔히 북한 주민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을 설명하기 위한 일차적 원인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인 사회 통제와 각종 대중 선전 매체 및 교육 제도를 통한 정치 사회화 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일반적인 물적 토대로서 한 사회가 위치해 있는 자리 공간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사상하고 있다.⁹⁷⁾ 더 구나 식민지 체험과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상태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분단 상태에 의해 규정되는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은 이 멘탈리티의 형성과 지속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물적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지적은 이 멘탈리티와 물적 토대를 매개하는 행위 주체의 문제도 사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멘탈리티는 그 자체의 이분법적 상징 체계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경험적 삶을 통해 해석되고 재구성된 신념

97) 한 연구자는 이런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영토에 기초하여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 주는 시리적 용어와 상징을 매개로 하여 일 국가의 지배 권력에 의해 창출되는 대외정책의 신념 체계를 민족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서, 이를 '지정학적 비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G. Dijkink, *National identity and geopolitical visions : maps of pride and pain*(London : Routledge, 1996), p. 14 참조.

체계의 옹집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 권력은 바로 이와 같은 주민들의 해석 및 재구성 과정에 개입하여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감정적 애착을 주조해 냄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고자 하는데,⁹⁸⁾ 이는 과거의 집합적 체험에 대한 기억을 선별적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⁹⁹⁾

이런 맥락에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지속과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이라는 그것의 물적 토대를 연결시켜 주는 유력한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실제로 북한에서 주민들 수준의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은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의 역사적 체험의 현재적 의미를 이중적으로 복원해 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일상 생활을 해나가면서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일제 때와 전쟁 때’라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¹⁰⁰⁾

1)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과 애국주의의 도덕률

북한 사회에서 일제 시기 피압박 민족의 수탈과 비애, 그리고 한국전쟁 동안 ‘조국’의 참상과 같은 과거의 부정적 체험에 관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은 조국의 상실이 치러야 될 값비싼 대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98) A. Confino, *The nation as a local metaphor*, p. 9 참조.

99) M. Halbwachs는 집합적 기억을 특정한 과거를 체험한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과거의 기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잠정적으로 이를 원용했다. H. Schuman and J. Scott,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June 1989), p. 362 참조. 그리고 거칠기는 하지만 필자와 유사한 문제 의식은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양성철·박한식 편, 『북한기행』(서울: 한울, 1986)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가 있다. 필자는 이 문제 의식을 좀더 정형화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의도보다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 멘탈리티가 자발적으로 수용되는 기제를 시론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데 그 차이가 있다.

100) 면담 자료 a)의 A씨 증언.

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사회적 균열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¹⁰¹⁾ 개인의 생애 경로와 세대간에 걸쳐 이와 같은 집합적 기억의 초기간적 현재성을 확보해 주는 매개물로는 제도화된 의례,¹⁰²⁾ 대중 선전 매체,¹⁰³⁾ 그리고 역사적 기념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은 일제 시기보다는 한국전쟁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집합적 기억을 실재하는 자리 공간적 특수성에 투사시킴으로써 주민들 수준에서 애국주의를 형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에 있어서 역사적 체험의 모사판이 아닌 정본(正本) 기록 현장이라는 점에서 제도화된 의례나 대중 선전 매체보다 더 강력한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념물의 예를 통해 이 점을 단편적으로나마 검토해 볼 수 있다.¹⁰⁴⁾

앞의 증언 [4]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었지만, 중학교 재학 시절에 신천 박물관¹⁰⁵⁾의 단체 방문에 참가했던 한 탈북자는 당시의 체험적 기억을 증

101) 1980년대 초에 북한을 방문했던 한 재미 교포 학자는 이 점과 관련하여 ‘지금은 아무 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대중 구호에 나타난 것처럼 ‘암울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는 자부심과 갑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태도를 볼 수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143쪽 참조

102) 여은룡, “조직 생활 속에서 철물랐던 인민학교 생활”, 88쪽; 임정희, “우리집 가정교육”, 『내가 받은 북한교육』, 20쪽; 동영준, “나의 청년시절과 사로청 활동은 이러하였다”, 위의 책, 140쪽 참조

103)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양은식 편, 『분단을 뛰어넘어』, 136쪽;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144~145쪽 참조

104) 이 점과 관련해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과 민족 정체성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에 있어서 과거의 이미지가 일상 생활의 물질적 대상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는가를 규명하는 것, 즉 상상 속에서 조국을 시각화하여 ‘신성한 영토라는 집합적 이미지의 구축’을 일상 생활 속의 정신적 속성의 일부분으로 구성해 나가는 방식의 규명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A. Confino, *The nation as a local metaphor*, pp. 9~10 참조

105) 신천 박물관(황남 신천군 소재)은 1958년 3월에 건립되고, 1998년 1월에 개축된 한국 전쟁 관련 기념물로서, 북한은 “1950년 10월 18일에 미군이 양민 900명을 방공호에서

언 [8]과 같이 회상했다.

(8)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안하고, 자연 그대로 놓고 생긴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도 상당히 떨리더라고요. 감정이 막 미국이 막 밟더라구. 미군이 정말 철천지원수다라는 것이 사실 가면 막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야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¹⁰⁶⁾

여기서 부정적인 역사적 체험의 집합적 재생산에 작용하는 은폐된 기제로서 북한 정권에 의한 집합적 기억의 선별적 재생산 문제의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의 예와 관련시켜 보면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자행했던 무차별 학살은 의도적으로 ‘망각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⁷⁾ 이는 민족 정체성의 형성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는 과소 평가하고 극소화하면서 자신이 당한 불의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극대화하려는 이중적 기준¹⁰⁸⁾을 적용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집단적 체험의 재생산 과정에서는 지배

불태워 죽인 학살 만행 현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전시해 반미 사상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http://www.nis.go.kr> 참조

- 106) 면담 자료 a)의 A씨 중인.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김정일이 신천 박물관을 방문하여 ‘신천 땅의 미제 만행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나, ‘미-북 해적선 샤만호’ 격침 기념 비와 함께 반미 계급 교양 장소로 되고 있는 ‘미제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에 대한 주민들의 침관 동원이 의미하는 바가 보다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중앙통신, 1999년 11월 22일 ; 중앙방송, 1999년 11월 28일 ; 국정원, <http://www.nis.go.kr>. 예컨대 김정일은 신천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인민은 미제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지 서는 안 되며 사람의 피를 즐기는 미제는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애야 한다”⁵¹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평양방송, 1999년 3월 19일 ; 국정원, <http://www.nis.go.kr>.
- 107) 시배 권력은 집단적인 역사적 체험의 특정 부면만을 집합적 기억의 현재성으로 선별적으로 재구성해 냅으로써 ‘선택적 망각 능력’을 은폐시킨다고 할 수 있다. S. Marten-Finnis, “Collective Memory and National Identit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1995) 참조
- 108) G. Csepeli, *National Identity in Contemporary Hungary*, pp. 208~209 참조.

권력과 자기 동일시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 당한 측면만이 일방적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있어서 희생자인 자신들은 ‘정의—선’이고 상대방은 ‘불의—악’이라는 이분법적 상징 체계가 작동하게 되고, 조국에 대한 배신은 곧 사악한 행위로서 물리적인 처벌의 위협을 의식하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단죄된다. 탈북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이 자신의 잘못된 ‘품성’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조국을 배신한다는(할 수도 있다는) 자기 성찰적 의식의 지평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기제의 작동하면서 애국주의는 행위 주체의 조국에 대한 배신을 ‘비법적’ 행위로서 자책하게끔 강제함으로써 배신의 ‘유혹’에 대한 내생적인 면역력을 길러주는 일종의 도덕률로서 위치지어진다.

2) 부정적인 집합적 기억의 전도와 통일 지향성의 체현

부정적인 역사적 기억의 재생산과 더불어 김일성의 지도력에 의한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구원과 전후의 성공적인 재건 등과 같은 ‘신화’와 관련된 과거의 긍정적인 체험 역시 집합적 기억으로 재생산되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와의 자기 동일시 위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주의의 내재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북한 내 여러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혁명 전적지나 혁명 사적지 등의 역사적 기념물의 답사 ‘의례’ 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¹⁰⁹⁾ 이 점을 영화라는 대중 선전 매체가 주는 효과에 관계된 한 예를

109) 김일성 일가와 관련된 이런 유의 역사적 상징물에 관한 소개로는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서울, 1995), 22~25쪽 참조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이런 역사적 상징물들이 ‘잘 꾸며진’ 여가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한 탈북자의 지적은 이것들을 매개로 한 ‘우상화’가 북한 사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¹¹⁰⁾ 증언 [9]에서 조국을 주제로 다룬 어떤 영화에 대한 감상 소감을 한 탈북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9) “우리가 옛날에 일제하에서 고통받으면서 살 때… 역시 고향(의)… 모든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 없다는 것 그 설움으로 해서… 빼아픈 추억으로만 남겨져 있(던)… 것이 우리에게 고향 하면 뿌듯한 감정을 주게 된 것은 김일성이가 일제를 쳐부수고 나라를 해방 시켜 준 그때부터…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조국이 김일성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면 나는 김일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¹¹¹⁾

이 증언에서 예시(豫示)되듯이 과거의 부정적인 집단적 체험을 전도시킨 긍정적인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은 민족적 자긍심과 애국주의에 기초한, ‘항일 혁명 전통’을 배경으로 한 절대 권력자의 의지가 체현된 자주적 통일 지향성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나갔다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¹¹²⁾ 김일성이 생전에 해방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남북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적 표시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95-1’로 정했다는 일화나 1990년 무렵에 ‘95년에 통일이 되면 그때나 결혼하겠다’고 말한 북한 여성들의 통일 의지를 연결시켜 보면 이 점이 조금은 분명하게 드러난다.¹¹³⁾ ‘그렇지 않겠어요?’라는 규범적 당위가 ‘왜?’라는 이유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한 탈북자의 증언 [10]은 이 점을 좀더 명료하게 보여준다.¹¹⁴⁾

110) 이는 필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증언 [9]는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을 매개로 한 온정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을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집합적 기억의 긍정적 재생산과 관련하여 본문의 맥락에 적합한 증언의 사례를 달리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용하였다.

111) 송경현, “북한의 실상과 사회과교육의 과제”, 341쪽.

112) 이 점 역시 좀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하지만, 단편적인 사례 제시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113) 심상덕, “김일성과 자동차번호판 95-1”, 『와 헛바쿠를 둉네까?』, 47쪽; 황병선, “내가 만난 북한사람들”, 위의 책, 268쪽 참조

(10) “조국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이건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날 길은 통일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믿고 있어요.”¹¹⁵⁾

3. 분단 체제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성

1) 비공식적인 집합적 기억과 집단 공포 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가시적 표출로 인하여 궁정적인 역사적 체험의 집합적 재생산을 통해 형성된 민족적 자긍심과 자주적 통일 지향성 사이의 괴리가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¹¹⁶⁾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것은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이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통일이 되어야 지금의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본다”는 탈북자들의 인식¹¹⁷⁾은 자주적 통일 지향성의 멘탈리티화와 주민들의 내핍 경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의 인격적 체현으로 여겨지던 김일성의 사망은 이런 괴리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남한이 ‘미제국주의의 가난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조선 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 의식’보다는 주민들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적 삶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의 계기로서 통일 지향성이 그

114) 이런 유의 증언들은 이미 언급한 수기 증언집(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에서 너무나 쉽게 읽어낼 수 있다.

115) 면담 자료 a)의 A씨 증언.

116) 최원규, 『북한은 어디로』, 292쪽 참조.

117) 이장호 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구』, 141쪽에 서 재인용.

들의 잠재 의식 속에서 편집광적 집착으로 고착화되었다고 여겨진다. 즉 자주적 통일 지향성의 추동력이 민족적 자긍심과 결합된 절대적 과업으로부터 주민들 자신의 삶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희구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일 지향성은 여전히 관성화된 이분법적 상징 체계의 작동하에서 “남한은 식민지이니까 통일할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식의 군사적 무력 우위 통일론으로 표상되고 있다.¹¹⁸⁾ 이는 대내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대외적 정세(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애국주의의 물적 토대인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이 본질적인 수준에서 거의 변한 게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중언 [11]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 “북한 주민들은 ‘조선이 망하면 세계가 망한다’, ‘조선이 미사일을 쏘아 대기권에 구멍을 내면 세계가 멸망한다’, ‘남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북한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조선의 상대는 미국뿐이다’ 등의 정치 선전을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형국이다.”¹¹⁹⁾

따라서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을 둘러싼 이런 미묘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정하는 물적 토대 수준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 생활의 내핍으로부터의 해방의 결정적 실현 계기로서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에 구속되면 될수록 그들은 부정적인 역사적 기억의 재생산을 통해 작동하는 통일의 ‘주적’인 ‘미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 두려움에 더욱더 압도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¹²⁰⁾ 이 과정에서 자주적 통일 지향성의 멘탈리티화에 기여해 온 긍정적인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은

118) 면담 자료 a)의 A씨 중언.

119) 면담 자료 c)의 D씨 중언.

120) 한 미국인 연구자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에 의한 ‘영구적 포위 공격 심리’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한겨례신문』, 1999년 11월 1일자 참조.

주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지배 체제에 더욱 집착하게 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현재의 지배 체제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준거점은 일제 시기와 한국전쟁에 관한 집합적 기억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부 구사회주의 사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식적인 집합적 기억의 선별적 재생산 과정에서 배제·억압되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비공식적인 집합적 기억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역사적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¹²¹⁾ 대량 아사 위기에 내몰린 상태에서 이들이 사적 영역에서 복원해 낼 수 있는 비공식적인 역사적 기억은 대다수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나이 든 사람들은 왜정 때보다 못하다고 말한다’는 것과 같은¹²²⁾ 식량난 이외에는 비교 준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이 식량난이라는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총체적인 삶의 일부분에 국한된 비교 평가에 의존하여 현재의 지배 체제를 상대화시켜 비판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일제 시기의 부정적인 집합적 기억의 흡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¹²³⁾

또한 적어도 이제까지는 이들의 자주적인 통일 지향성에 있어서 남한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미제의 가난한 식민지’라는 부정적 상징으로서 작용할 뿐이지, 서독이 동독 주민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와 자유의 상징으로서 민족 정체성의 공유 대상이 되었던 관계¹²⁴⁾와는 질적으로 상이

121) 긍정적인 집합적 기억의 선별적 재생산 과정이 김일성(부자)의 항일 혁명 전통 ‘신화’의 창조와 이에 토대한 주민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영도자로서의 위상을 정당화 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의도적인 ‘망각의 재생산’이 이루어 어지고 있지만, 이는 김일성(일가)의 족적에 관련된 ‘신화’에 한정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집단적인 역사적 체험에 관한 ‘신화’일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 속의 대중의 집단적인 체험에 비춰볼 때 일제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기와 비교하여 더 부정적인 시기가 있었다는 규범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122) 예컨대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 33쪽 참조

123) 이 점에서도 ‘제2사회론’의 문제 의식을 현재의 북한 사회에 적용하여 그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124) A. Staab, *National identity in Eastern Germany*, p. 102 참조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위기에 내몰린 주민들은 집단적인 역사적 체험에 관한 집합적 기억의 이분법적 재생산이 가져온 효과, 즉 한 편으로 현재의 지배 체제를 상대화시켜 자기 평가할 수 있는 비교 준거점의 사실상의 이중적인 부재 상황(과거 지향성과 미래 지향성의 동시 부재)과 다른 한편으로 일상화된 집단 공포 심리로 인해 현재의 지배 체제에 집착하도록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 지속의 매개물로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바, 중언 [12]~[15]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2) “미국과 남조선이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죠… 68년인데 그때 프에블로 사건 때 생각하기를 전쟁 나면 다 죽는다. 핵폭탄이 뭐 천 개나 된댄다.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구… 상당히 두려워했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원자탄 떨군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월남했어요. 무서워했어요. 또 원자 폭탄에 대비한 훈련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원자탄 투하시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내려오는데… 이제 만성화되었으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만성이 되면 불감증이 되거든.”¹²⁵⁾

(13)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통일을 위해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생각—인용자)하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살갔나 불만 불평으로 넘어가는 게예요. 표현은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떨쳐나가겠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도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이거래도… 또 당원이면 당원은 무조건 죽인다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생을 마쳐야 된다는 생각이라는 거죠.”¹²⁶⁾

(14) ‘인민반에서 남한으로 넘어간 사람의 눈알을 남한의 특수 여군들이 뽑아내는 비디오를 관람한 적이 있다.’¹²⁷⁾

125) 면담 자료 a)의 A씨 중언.

126) 면담 자료 a)의 A씨 중언.

127) 면담 자료 c)의 C씨 중언.

(15) '신포항 어부들이 출항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여 남조선에 억류되었다가 송환되었는데, 남한에서 특수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귀환한 뒤 3년 안에 모두 사망했다.'¹²⁸⁾

2)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이율 배반적 사회 통합 효과

이와 같이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는 집합적 기억의 현재적 재생산을 매개로 한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는 현재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은 북한 정권이 대내적인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화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은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인 원형적 특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한 북한 주민들의 집합적 기억을 매개로 하여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를 지속시켜 주는 물적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전혀 비현실적이지만은 않다.¹²⁹⁾ 즉 이런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 지속 기제가 작동하는 한 증언 [16]과 [17]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내부의 경제 위기는 조국 통일이나 조국 보위를 담보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 부담이나 제국주의의 경제 봉쇄 탓 등으로 쉽게 돌려질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잠재적인 사회적 균열을 봉인해 줄 수도 있다.

128) 면담 자료 c)의 B씨 증언.

129)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와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런 논의의 합의는 한정적이다. 이 글에서 원용하고 있는 M. Halbwachs식의 '집합적 기억' 정의도 분석 도구로서 대단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공유되는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그 해석적 의미 부여가 동질성을 지니는 시의 여부를 실제 작업을 통해 파악해 내야 한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H. Schuman and J. Scott,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y", pp. 378~379 참조 그러나 시론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이 글에서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현재 필자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고, 또 이는 근본적으로는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집중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 방면의 현재의 북한 연구가 어쩌면 넘어설 수 없는 벽인지도 모른다.

(16) “동네 주민들에게 식량 위기가 북한 체제의 내적 모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 그들은 내가 안기부의 임무를 받고 왔는가 하고 의심한다. 이는 안전부, 보위부, 인민반에서 나와서 현재는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맹렬하게 선전한 결과이기도 하다.”¹³⁰⁾

(17) ‘주민들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의 대북 경제 봉쇄 때문에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선전을 수용하고 있다.’¹³¹⁾

여기서 의당 이런 논지의 결정론적 합의를 배제해야 하겠지만,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가 북한에서 대내적인 지배 질서의 위기가 정권 또는 체제 수준의 위기로 정형화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멘탈리티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는 한편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특징지어지는 그 자체의 물적 토대의 구속력에 의해 주민들을 조국 보위라는 절대 절명의 과업에 결박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을 집단 공포 심리로 포획해 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내핍 경제의 장기적인 일상화가 강제해 온 물질적 삶의 질곡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서 관념화된 통일 지향성에 집착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을 구원과 희망으로 포섭해 내기 때문이다.¹³²⁾ 요컨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는 ‘공포’와 ‘희망’이라는 이율 배반적·심리적 힘의 동시적 결합에 의해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구속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효과적으로 보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30) 면담 자료 c)의 F씨 증언.

131) 면담 자료 c)의 B씨와 G씨 증언.

132)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에 규정되는 양가적인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효과는 북한 정권이 활용하는 상징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공포 전략’과 ‘희망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405~407쪽 참조.

VI. 맷음말

이 글은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심각한 경제 위기 및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사회적 통합을 유지해 온 원인을 행위 주체로서의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사회적 통합의 담지자로 역할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한 시론적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주민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구속하면서 사회적 잠재 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비물질적 힘으로서 ‘멘탈리티’를 설정하고서, 분석적 수준에서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를 크게 집단주의, 온정주의,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세 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

각 유형의 멘탈리티가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멘탈리티의 이분법적 가치 체계의 작동 방식과 그것들의 물적 토대의 규정력, 그리고 양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적 장치의 자율성 정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경우 그 자체의 상징적인 자기 정화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집단주의 멘탈리티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크게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주의 멘탈리티가 형성되고 지속되기 위한 물적 토대가 주민들의 평준화된 절대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인데, 1960년대 이후 북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이런 물적 토대가 약화되고 그에 따라 집단주의 멘탈리티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형성과 지속을 매개했던 천리마 운동이 물적 토대에 대한 매개자로서의 자율성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집단주의 멘탈리티에 물적 토대의 변화를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집단주의 멘탈리티의 약화를 초래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최근 수년 동안의 식량 위기

국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그 자체의 상징적 가치 체계가 '종교적 결정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기 정화 작용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작용에 힘입어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그 물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물질적 생활 수준 보장 문제에서 1980년대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통합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온정주의 멘탈리티와 그 물적 토대를 매개하는 인격체로서의 절대 권력자가 물적 토대로부터 일정하게 자립화 할 수 있게 해준 북한 사회의 전후 재건 과정의 특수성도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또 이와 같은 절대 권력자의 이중적 위상은 현지 지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 자신의 존재를 시현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지 지도에 내재되어 있는 이율 배반적 효과 때문에 온정주의 멘탈리티가 물적 토대로부터 완전히 자립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라는 현지 지도의 부정적 효과의 발현과 권력 승계라는 인격체로서 절대 권력자의 교체가 맞물림으로써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그 이전에 비해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기제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온정주의 멘탈리티는 여전히 주민들의 사회적 균열을 억제하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도 온정주의 멘탈리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상징적 가치 체계의 자기 정화 작용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온정주의 멘탈리티와는 달리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에 의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 효과는 집단적인 역사적 체험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재생산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집합적 기억은 일차적으로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물적 토대인 한반도의 지리 공간적 특수성으로부터 선별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는 특

히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자주적 통일 지향성을 둘러싼 상징적 가치 체계의 전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효과는 본질적으로 영토 정체성에 집착하는 주민들의 집단 공포 심리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는 경제 위기와 같은 대내적 안보 위기조차도 일정한 정도 무력화시켜 잠재적인 사회적 균열을 억제하고 봉인해 버릴 수도 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집합적 기억의 선별적 재구성에서 배제·억압되는 비공식적인 집합적 기억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교의 준거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도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가 강력한 사회 통합 기제로서 작동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해서 이 글은 경제 위기, 특히 주민들의 사활적 이해 관계가 걸려 있을 정도로 심화된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들의 사회적 의식과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구속하는 탈식민지 멘탈리티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멘탈리티가 주민들을 포획해 내는 방식이 일차적으로 집단 공포 심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주민들에게 강력한 흡인력을 갖는 이유는 한반도의 자리 공간적 특수성에서 기인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멘탈리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될 것이다. 첫째, 북한 주민들을 수동적인 지배의 대상으로만 파악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행위 주체로서 그들이 자신들의 자율성과 성찰적인 사회적 의식을 자발적으로 유보하게끔 만드는 요인과 그 요인이 지배 권력과 이들 사이를 어떤 기제에 의해 결합시켜 주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곧 넓은 의미에서 북한 사회의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가 그 실천적인 합의와 관련하여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둘째, 탈식민지 자민족 중심주의 멘탈리티의 지속을 매개하는 집합적 기억의 구체적인 양태와 관련시켜 볼 때 북한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기인하는 특수성과 사회주의 사회의 한 유형적 사례로서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의 문제를 결합시키는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있다 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글은 매우 불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설적인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북한 사회의 주민 통합에 관한 문제 의식을 정형화하기 위한 어설픈 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엄격한 논증과 신중한 자료 분석이 요청되는 적지 아니한 부분에서 도식적인 해석과 자기 정당화가 이를 대신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이 점 역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정구·법륜,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 정토출판, 1999).
- 김명수, “계급 및 계층 구조와 사회 불평등”, 『북한사회의 이해』(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7).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1970)”(성균관대 정외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영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김정규, “남북한 갈등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 『사회과학논총』(성신여대), 제8집(1995).

- 남북문제연구소,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서울, 1994).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서울, 1995).
- 동영준, “나의 청년시절과 사로청 활동은 이러하였다”, 『내가 받은 북한교육』(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 류호열, “김일성 ‘현지지도’ 연구 :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1994).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1996).
- 박종철 외,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 나남, 1995).
- 손기웅, “북한정신문화 연구”, 『평화통일연구』(세종대), 제2권(1996).
- 송경현, “북한의 실상과 사회과교육의 과제 : 귀순 대학생 정현과의 대담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26집(1993).
- 심상덕, “김일성과 자동차번호판 95-1”, 여만철 외, 『와 헛바쿠를 돋네까?』(서울 : 다나, 1995).
- 안계춘,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결과의 재분석』(서울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0).
- 여은룡, “조직생활 속에서 철몰랐던 인민학교 생활”, 『내가 받은 북한교육』(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서강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윤여상,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영남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양성철·박한식 편, 『북한기행』(서울 : 한울, 1986).
- 이문웅, 『북한체제 변화실태 연구』(서울 : 국토통일원, 1989).
- 이석호, “남북한 국가관·대외관의 갈등양상”, 강광식 외, 『통일후유증 : 1
복방안 연구』(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이우홍, 『가난의 공화국』(서울 : 통일일보사, 1990).
- 이장호 외,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 연
구』(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 이종석, 『북한주민 의식구조 및 가치관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 임정희, “우리집 가정교육”, 『내가 받은 북한교육』(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 전우택·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서울 : 오름, 1996).
- 전효관, “북한 정치담론의 의사소통구조와 전략”,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1998).
- 좋은벗들 엮음,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서울 : 정토출판, 1999).
- 최봉대·오유석, “은어·풍자어를 통해 본 북한체제의 탈정당화 문제”,
『한국사회학』, 제32집(1998).
- 최신덕, “남북한 여성의 역할”, 여만철 외, 『와 헛바쿠를 둡네까?』(서울 :
다나, 1995).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마산 :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6).
- 최익환, “귀향”, 양은식 편, 『분단을 뛰어넘어』(서울 : 고려연구소, 1984).
- 최재현, “북한사회이념 속의 전통적 요소”, 『동아연구』, 제14권(1988).
- 최평길, 『남북한주민의 의식구조비교』(서울 : 국토통일원, 1986).
- 통일원 조사연구실,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서울, 1990).
- 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통제』(서울, 1994).

-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양은식 편, 『분단을 뛰어넘어』(서울 : 고려연구소, 1984).
- 황병선, “내가 만난 북한사람들”, 여만철 외, 『와 헛바쿠를 둘네까?』(서울 : 다나, 1995).
- Alexander, Jeffrey C., “Analytic debates”, J. C. Alexander & Steven Seidman eds., *Culture and Society*(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Altman, Yochanan, “Second economy activities in the USSR : insights from the southern republics”, Peter M. Ward ed., *Corruption development and inequality*(London : Routledge, 1989).
- Besancon, Alain, *Court Traite de Sovietologie à l'usage des Autorites Civiles, Militaires et Religieuses*(Paris : Hachette, 1976) ; 정낙중 역, 『공산주의 본질 : 소련사회현상의 이론적 비판』(서울 : 형설출판사, 1981).
- Confino, Alon, *The nation as a local metaphor*(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 Csepeli, Gyorgy, *National Identity in Contemporary Hungary*, trans. by M. D. Fenyo(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Curry, Jane L., “The Sociological Legacies of Communism”, Z. Barany and I. Volgyes eds., *The legacies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Dijkink, Gertjan, *National identity and geopolitical visions : maps of pride and pain*(London : Routledge, 1996).
- Doob, Leonard W., *Patriotism and Nationalism : their psychological foundations*(New Haven : Yale University, 1964).
- Feher, Ferenc, “Paternalism as a Mode of Legitimation in Soviet-type

- Societies”, T. H. Rigby and Ferenc Feher eds., *Political legitimization in communist states*(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 Gilberg, Trond, *Nationalism and communism in Romania*(Boulder : Westview Press, 1990).
- Gross, Jan T., “Social Control under Totalitarianism”, D. Black ed.,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Control*, vol. 2(London : Academic Press, 1984).
- Hankiss, Elemer, *East European Alternatives*(Oxford : Clarendon Press, 1990).
- Koralewicz, Jadwiga, “Changes in Polish Social Consciousness during the 1970s and 1980s : Opportunism and Identity”, J. Koralewicz et al. eds., *Crisis and transition : Polish society in the 1980s*(New York : Berg, 1987).
- Lane, David S., *The rise and fall of state socialism*(Cambridge : Polity Press, 1996).
- Marten-Finnis, Susanne, “Collective Memory and National Identit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8, no. 2(1995).
- Ostner, Ilona,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transition : The case of post-unification Germany”, H. Jones and J. Millar eds., *The politics of the family*(Aldershot : Avebury, 1996).
- Rau, Zbigniew, “Introduction”, Z. Rau ed.,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Boulder : Westview Press, 1991).
- Ryang, Sonia, *North Koreans in Japan : Language, Ideology and identity*(Boulder : Westview Press, 1997).

- Schiedeck, J. and M. Stahlmann, "Totalizing of Experience : Educational Camps", H. Sunker and Hans-Uwe Otto eds., *Education and Fascism*(London : The Falmer Press, 1997).
- Schuman, H. and J. Scott, "Generation and Collective Mem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June 1989).
- Shlapentokh, Vladimir,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Staab, Andreas, *National identity in Eastern Germany*(Westport : Praeger, 1998).
- Sztompka, Piotr, "Cultural and Civilizational Change", Bruno Grancelli ed., *Social Change and Modernization*(New York : Walter de Gruyter, 1995).
- Thurston, Robert W., "Social Dimensions of Stalinist Rule",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24, no. 3(1991).
- Vainshtein, Grigory, "Totalitarian Public Consciousness in a Post-Totalitarian Society",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27, no. 3 (1994).
- Wnuk-lipinski, Edmund, "Social Dimorphism and its Implications", J. Koralewicz et al. eds., *Crisis and transition : Polish society in the 1980s*(New York : Berg, 1987).
- 국정원, <http://www.nis.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Abstract)

The Ment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Choi Bong Dae(Kangwon University, Sociology)

This article examines the group 'mental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 a mentality said to constrain in the unconscious layer, their soci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The North Korea mentality integrates the people and helps maintain social order. This paper will address the North Korean mentality as catagorized into three aspects : the 'collectivist', 'paternalistic' and 'self-reliant reunification' orientations.

The 'collectivist' orientation had integrated the people with some remarkable success because they realized that individual and collective interests could exist simultaneously at the cost of certain self-sacrifices. A good example of this can be found in the Chollima Movement of the late 1950's. However, the dichotomous boundary of the symbolic value system in this orientation became unstable due to the worsenning economic situation of the society. The current food crisis has forced the people to seek an

individualized family subsistence strategy to the detriment of 'collectivism' in the society.

The 'paternalistic' orientation has contributed to the stability of the society by virtue of not only the maintenance of the basic living standard but also the people's positive evaluation of Kim Il-Sungs leadership of which the background is related to his career of the anti-Japanese activities and the successful postwar reconstruction. In this context the self-purification capacity of the dichotomous symbolic system encourages North Koreans to view their leader as a god. The so-called 'on-the-spot-guidance' has performed as a valuable link connecting the people and the leader.

Owing to this peculiar psychological attitude, society has managed to maintain cohesiveness in the face of the country's slow economic deterioration. However, there are limits. This guidance and paternalism have encroached steadily upon the people's capacities to be autonomous and self-reflective subjects. As well, the 'paternalistic' mentality has been maintained through a specifically personalized medium. Therefore, it is not certain whether under Kim Jong-il's regime the 'paternalistic' orientation can be maintained as strongly as under his father's regime.

The desire to achieve 'self-reliant reunification' has strongly integrated the society. It has secured its resources and strength directly from the ever-present military tension that exist on the divided peninsula. Fueled by the collective memories of experiences they fac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ns maintain their collective desire for self reliance. The people have fought hard for their land, and their acceptance of the symbolic value system and patriarchal leadership is

fostered by the fear of losing the territory.

In the near future this orientation may continue to operate effectively as long as the self-evident *raison d'être*(the current division of the peninsula) sustains its negative characteristicst. In this context it may be said that the 'self-reliant reunification' orientation in the people's mentality has been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has kept the 'social calm' even in the face of mass starvation and poverty.

Key Words : North Korea, Mentality, Social Integration